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정 명 채 (연구위원)
민 상 기 (책임연구원)
최 경 환 (책임연구원)

연 구 답 당 자	담 당 분 야
정 명 채	연구총괄, 제1장, 제6장, 부록 집필
민 상 기	제2장, 제3장 집필
최 경 환	제1장, 제4장, 제5장 집필

머 리 말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계속되는 이농과 그에 따른 급속한 노령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농어촌사회는 크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농업부문의 상대적 취약성은 UR협상과 농산물시장 개방에서 커다란 정치·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사회가 발전될수록 많은 직업집단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각각 조직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힘을 모으고 자구적 노력을 통해 그들이 처한 사회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게 된다. 앞으로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고 각 직업집단별로 권익 추구활동이 강화될 경우 농어민집단의 자발적 이익단체들의 자구적인 이익 보호활동과 권익 추구활동은 농업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농업부문의 비중이 급속히 위축되고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농어민들은 조직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권익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 농어민단체들의 자구적 노력과 농어민 권익 추구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자료집은 농어단체 중에서도, 특히 농어민의 권익을 추구하고 지위향상에 기여해야 할 농민운동단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그 활동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주요 농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의 발전과정과 활동 현황을 자료로서 정리코자 하였다.

이 조사연구 결과가 당국 및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본 조사과정에서 자료 제공과 면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해당 농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995.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목 차

제 1 장 농업 여건 변화와 농민운동의 전개과정

1. 1960년대	1
2. 1970년대	7
3. 1980년대	14
4. 1990년대 (최근)	21

제 2 장 한국가톨릭농민회

1. 설립 배경	25
2. 조직 목적과 활동 방향	26
3. 조직화과정	27
4. 운영체제와 주요 활동	30
5. 한계점과 과제	56

제 3 장 한국기독교농민회

1. 설립 배경	59
2. 조직 목적과 활동 방향	60
3. 조직화과정	62
4. 운영체제와 주요 활동	64
5. 한계점과 과제	83

제 4 장 전국농민회총연맹

1. 설립 배경	85
2. 결성 목적과 활동 방향	92
3. 조직화과정	93
4. 운영체제와 주요 활동	96
5. 한계점과 과제	110

제 5 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 결성 배경	113
2. 결성 목적과 활동	115
3. 조직화과정	116
4. 운영체제와 주요 활동	118
5. 한계점과 과제	121

제 6 장 농민운동단체의 조직과 활동방식

1. 조직방법	124
2. 조직의 성격	127
3. 운동 방향	129
4. 농민운동 내용	131

부 록 주요 농민단체 주소록	135
-----------------	-----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성장단계별 주요 활동 목표와 활동 내용	39
--	----

제 3 장

표 3-1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성장단계별 주요 활동 목표와 활동 내용	70
--	----

제 4 장

표 4-1 단일조직에 대한 3개 단체(전농협·전농연·독자농)의 주요 견해 비교	91
표 4-2 전농의 회원조직(군단위) 실태	96

제 5 장

표 5-1 여성농민 개혁안	123
----------------------	-----

제 6 장

표 6-1 농민운동조직의 특성 비교	127
표 6-2 농민운동의 내용 비교	132

그 립 목 차

제 1 장

그림 1-1	1960년대의 농민단체의 발전과정	7
그림 1-2	1970년대의 농민단체의 발전과정	13
그림 1-3	1980년대의 농민단체의 발전과정	19
그림 1-4	1990년대의 농민운동 관련 단체 현황	23

제 2 장

그림 2-1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조직화과정	28
그림 2-2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조직 운영체계(1971~89년) ..	32
그림 2-3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조직 운영체계(1990년~)	33

제 3 장

그림 3-1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조직화과정	63
그림 3-2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조직 운영체계(1971~89년) ..	66

제 4 장

그림 4-1	농민운동단체의 발생과 통합과정	90
그림 4-2	전국농민회총연맹 기구표	97

제 5 장

그림 5-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결성과정	115
--------	------------------------	-----

제 1 장

농업 여건 변화와 농민운동의 전개과정

1. 1960년대

1. 1. 농업 여건

우리 나라가 독자적인 국민경제를 형성하게 된 것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1945년의 해방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태였다. 따라서 1950년대는 취업자의 7할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신규 고용의 증가도 대부분 1차산업에서 흡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산업화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우리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1960년대초 들어서 우리 나라 최초의 종합경제계획인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 ~ 66)이 추진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을 기본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중점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업소득의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을 중점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의 농업부문의 주요 목표는 ‘농업증산’과 ‘생산과정의 근대화’이었으나 1961.8 ‘농산물가격유지법’의 공포, 196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농협의 발족, 1962.6 농림부내에 ‘농업구조정책심의위원회’설치, 1967.1 ‘농업기본법 제정’ 등 농산물 가격정책, 농촌조직의 정비 및 농업구조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이고 불균형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특히, 개발계획의 진행과정에서 화폐개혁의 실패, 인플레이, 흉작, 외화 위기 등 여러 가지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 대부분을 해외자본 도입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은 농업·농촌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최하층 농가에게도 통계상으로는 잉여가 발생할 정도로 1950년대에 비해서는 많은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절대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였다. 또한 농가경제는 농업생산이 기상조건 등에 따라 극심한 변동을 보였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업부문의 노동시장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1960년대말 이후와 같은 농촌인구의 대량 이농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의 농민층의 동향(농민층분해)은 쉼계층적 상향운동과 임대차 관계가 확대된 것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60년대 전반은 한국 경제 전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에 있어서도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과에 고무된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 ~ 71)을 추진하였다. 기본목표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었는데, 이중 1차산업의 목표는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녹화와 수산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당초 목표는 1968년에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전체적인 성장

를을 상향 조정한데 비해 농림수산업의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외자 도입을 확대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농정의 기조는, 증산을 통한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목표를 답습하는 한편, 농가 소득의 증대와 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농공병진을 표방한 것에 특징이 있었다. 먼저 식량증산정책을 보면,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농업용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식량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67년, 1968년의 대가뭄으로 미곡의 대흉작을 경험하는 등 식량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식량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1969.1부터는 모든 음식 판매업소의 혼식을 의무화하는 등 미곡의 소비를 억제하게 되었다.

또한 농공병진과 농어민소득증대특별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농어촌개발공사를 설립(1967. 12)하고, 1968 ~ 71년 4년간 제1차 농특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들어서는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을 실시하였다. 1968년산 수매가격을 전년 대비 17% 인상한 것을 비롯하여, 1968 ~ 71년 기간 연평균 25.1%를 인상하는 고미가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1969년부터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였으며, 1972년부터는 맥류 수매가격의 예시 및 맥류의 무제한 수매를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보리 쌀의 매입가격이 평균 생산비를 밑돌아 생산자가격을 지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식량 증산에 역점을 두었으나 소비량의 증가와 잦은 흉작으로 식량의 해외 의존도는 크게 높아지고 농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양적 지표에 있어서도 대체로 목표를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에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성장의 원동력을 해외부문(외자)에서 구함에 따라 농업과 공업의 분업관계는 파괴되어 경제발전에서의 농업의 본래

의 역할(식량 및 산업 원료의 공급, 공산품의 소비시장, 자본의 조달 등)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고, 우리 농업은 고도성장을 위한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원 역할을 함으로써 그 역할이 왜소화되었다.

또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중의 고도성장은 농촌사회와 농업 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초래했다. 먼저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확대시켜 대량의 이농이 발생하였다. 농가호수와 농가인구가 196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경지면적은 1968년의 231.9만 정보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가 전 계층에 걸쳐 감소함으로써 농업의 전층 하향 분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한편에서는 농가호수(때로는 면적까지)가 감소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상층농의 호수가 증가하고 경지도 상층농으로 집중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농민운동의 실태

농민운동의 전개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갑오동학 농민운동(1894)과 일제하의 소작쟁의, 농민조합운동, 농촌계몽운동 등을 들 수 있지만 이러한 운동들이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향상시키기에는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웠을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거나 계속성이 없어 역량도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현대적인 조직력과 연속성에 기반을 두는 농민운동의 전개는 대개 광복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는 12월 8일의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결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농민운동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좌익성향을 띠었다. 해방후 남과 북의 이념이 좌우익으로 나누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이어 이에 대응하여 우익계의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나중에 대한농민회로 이어졌다. 또한 1952.8에는 농업지도요원 양성소가 개설되었고, 1954년에는 농촌문화연구회, 1956년에는 한국농업문제연구회 등이 발족되었다. 즉,

1960년대 이전의 농민단체활동은 농민의 권익신장운동으로서의 농민운동이 아니라 기술보급운동이나 교양교육 정도에 치중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도 농민운동은 그 이전과 같았으며, 다만 기술이나 교양교육이 더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술보급이나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탄생되었다. 먼저 1960년 10월에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부산원예고등학교에서 제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전국의 독농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사단법인)로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운동에 목적을 두었으며, 농민운동적 성격을 띠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전국의 독농가들을 회원으로 규모를 확대해감으로써 최근에 와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1962년에는 한국농민자주총연맹이 설립되어 2년 정도 명목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1962년 4월에는 농촌지도사업에 열의를 가지는 4-H 출신과 독농가들로서 구성된 농촌자원지도자단체가 농촌진흥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후 지역간 연합조직을 결성하여 도·시·군 연합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들은 농촌청소년지도와 농업기술지도보급운동을 목적으로 하므로써 사회운동적 성격을 띠지는 못했으나 1960년대 중반에는 그 조직이 커지면서 대학 4-H 조직과 연계되어 농민운동적 성격을 강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기술지도, 청소년 선도 등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를 초월해서는 안된다는 외적 요구와 농민운동으로 확산시키려는 내적 욕구와의 갈등 속에서 일부의 회원들이 1964년에 한국농민회를 발족시키게 된다. 한국농민회는 처음부터 농민운동적 성격을 띠고 발족했으나 여러 가지의 외적 영향과 압력 등으로 별 성과없이 4년만에 해산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농촌·농민문제에 모순을 지적하면서 농정과 경제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농민운동적 성격의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1966년에는 농민운동에 관심을 갖거나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를 창립하였으며, 초기단계에

는 학계와 정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의 정규 강좌는 현실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농업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이들에게 농민운동의 열의를 촉발시키는 결과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기독교농민회나 한국가톨릭농민회의 발족과 농민운동 전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66.10에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가 창립되었으며, 이들은 1967~68년에 경북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야학, 협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는 1958년에 가톨릭교내에 발족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로부터 태동되었다. 도시의 노동자층 농촌 출신이 대부분이며, 농촌문제는 곧 도시문제로 연결됨을 인식한 노동청년회가 그 조직내에 농촌청년부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1960년대까지의 자생적 농민조직의 주류는 기술학습과 근면, 협동, 리더십훈련을 실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학습단체활동이 주축이었다. 5·16 직후 재건국민운동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표방하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만들어 전개되었으나 수년후 민정화단계에서 정치바람에 흐지부지되고, 민주적인 농민운동으로는 승화되지 못했다. 이 기간중 농민운동단체적 성격의 농민단체들은 정치적 압력에 대한 대응방법의 진부, 운동자금의 부족, 운동방법에 대한 무지, 농민의식의 불철저성 등으로 운동체로서의 성격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막연한 불만은 운동으로 연결될 수 없었다. 또한 1960년대는 농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였기 때문에 농민들도 별 저항없이 공업화정책(제조공업 중심의 경제개발계획 등)에 호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기술진흥과 농촌청소년 지도훈련단체들 속에서도 농업문제와 농정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면서 운동적 성격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 1960년대 이전의 농민운동적 성격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정치적 압력에 견딜만큼 조직적이고 치밀하지는 못했으나 산발적이면서 잠

그림 1-1 1960년대의 농민단체의 발전과정

- 1960.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발족
- 1962. 한국농민자주총연맹 발족
- 1964. 한국농민회 발족
- 1965. 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 발족
- 1964.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농촌청년부 신설
 - 1966.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로 독립
 - 1971. 한국가톨릭농민회로 개칭

재적인 형태로서 정치적 화살을 피하기 위한 비정치적이며 비운동적인 조직체의 이름하에 의지를 모으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2. 1970년대

2.1. 농업 여건

1970년대 들어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76)이 추진되었다. 농정과 관련된 목표로는, ① 식량을 증산하여 주곡을 자급하고 농어민 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지정리 및 기계화를 촉진하고, ② 농어촌의 보건 및 문화시설을 충실화하고 農漁村電化 및 농어촌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중에 추진된 주요한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이 때까지 추진해 온 식량 증산 및 양곡정책의 계속적인 실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다수확품종을 개발하여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즉, 1971년 다수확품종인 통일벼가 농가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기술상의 어려움과 농민의 저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통일벼는 미곡의 획기적인 증산에 크게 기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농업용수 개발, 대단위농업종합개발, 경지 정리와 배수 개선, 농지 보전과 확대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의 확충과 농업기계화사업도 계속 추진하였다. 또한 1960년대 후반부터 실시해 온 고미가정책과 이 중곡가제를 계속 실시하였는데, 통일벼 재배의 확산으로 수매량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는 누적되었다. 미곡 증산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미곡 소비절약시책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1976년 경에는 주곡의 경우 거의 자급을 달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곡의 자급이 식량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의 주요 농업정책의 다른 하나는 새마을사업의 추진이다.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강조하는 일종의 정신운동으로 먼저 환경개선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안길 넓히기, 소하천 가꾸기, 지붕 개량, 상수도 시설, 마을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는 한편, 발전단계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구분하여 기초마을과 자조마을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소득 증대와 직결될 때 영속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고 정신 개발, 환경 개선과 동시에 소득 증대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1972 ~ 76년의 5년동안 제2차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실시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중에도 농촌·농업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농가경제는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이는 미곡 증산과 가격지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농가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의 격차는 확대되었다. 즉, 평균적으로는 농가경제가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농가의 절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영세농은 여전히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 기간에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과 마찬가지로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 그리고 경지면적의 감소는 ‘전제충하강’을 나타냈다.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 후반기는 대내외 정치·경제환경의 커다란 혼란이 반복되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있었고 1979.10에는 10·26사태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정은 1980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세계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1977 ~ 78년 2년간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국제수지의 개선으로 인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과 국내경기호황에 따른 국내의 과열투자수요가 현재화한 반면, 공급애로요인의 발생으로 물가가 등귀하고 부동산투기가 과열되었다. 뒤를 이어 고도성장과 과열경기의 후유증이 현재화되기 시작하고 정부가 고도경제성장보다는 안정성장을 내세우면서 양적 팽창을 지양하게 되었고, 정부주도형과 시장보호형에서 민간주도형과 시장개방형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과 함께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아 1979년부터는 다시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민소비구조는 양적 증가에서 질적인 다양화로 크게 변화하여 전통적인 쌀·보리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에 축산물과 과채류의 소비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변하는 농수산물여건 변화에 생산 및 가격체계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수급의 괴리현상이 나타나 각종 농산물 파동을 겪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기 이후는 농업부문도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주곡 증산론(주곡 증산과 이종곡가제의 계속 실시)과 양정 전환론(이종곡가제의 단계적 폐지)이 대두하였고, 1977년 중반부터는 농업과 공업에 대한 상대적 비교우위론이 확대되므로써 양정을 둘러싼 논쟁은 농업 전반에 걸친 농업 보호와 농업 개방에 대한 정책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의 농업부문의 정책목표는, ①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② 주식인 쌀·보리의 자급 지속과 밀, 콩, 옥수수 등 부족 식량의 수입을 통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③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④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주요 농업정책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식량 증산정책이다. 농업생산기반의 조성을 위해 농경지의 신규개발 확대와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중심의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농업기계화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1977년에는 국내 최대의 제7비료공장이 완공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77년에는 미국 생산량이 4천만석을 돌파하여 미국의 자급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쌀 자급률 달성도 7분도정제의 폐지, 통일벼의 양조용 허용과 신품종 다년재배로 인한 새로운 병충해의 발생,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한 일반미 선호, 농민들의 일반벼 재배 선호 등의 원인으로 쌀 생산실적이 감소하여 1979년에는 쌀 도입이 불가피하였다. 게다가 1980년에는 엄청난 냉해로 인하여 외국 쌀을 대량 수입하게 되었다. 둘째, 경제작물의 생산 확대와 가격 파동이다.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작물의 증산에 농정의 많은 비중이 주어져서 주산단지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작목간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배추 파동(1978) 등 각종 농산물 파동이 일어났다. 셋째, 축산진흥정책이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축산물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대처하고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축산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한편 물가조절을 위해 1976년부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반면에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축산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진흥기금을 설치하였다. 또 1978년에는 이 진흥기금을 기반으로 축산진흥회가 설립되었는데, 1981년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분리·독립하였다. 넷째, 양특적자의 누증과 저곡가정책이다. 양곡기금상의 결손 대부분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해 음에 따라 재정적자의 누증을 가져왔다. 한편 1970년대 말부터 미국 수매가격의 인상률을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책정하였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정책이다. 1977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아울러 시장법, 축산법 등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개정하였다. 여섯째, 농산물 수입 자유화정책이다. 1978년에 수입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1978.2 수입 자유화의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이후 3

차에 걸쳐 수입 자유화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곱째, 농어촌 환경 개선과 농업 관련 모든 제도의 개선이다. 새마을운동을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였다. 또한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부녀화로 농업노동력의 절대적 부족과 질적 저하에 놓이게 되자 복지농촌의 기수로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농어촌 환경개선시책으로 農漁村電化事業이 시행되었다.

2.2. 농민운동 실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기간을 거치면서 농업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정책 제시 및 정책 비판의 차원을 넘어 농업문제의 올바른 인식에 근거한 농민운동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지식인들의 인식과 가톨릭, 기독교 등 종교계의 협력에 의하여 농민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 발족된 농촌자원지도자연합회는 조직활동의 갈등을 정리하고 농민운동과 농촌지도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작목별 전문기술을 통한 과학영농의 시범으로 지역농업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며 아울러 농촌 후계세대의 지도·육성과 농촌문화의 창달 및 농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즉, 1970년 3월 사단법인 전국농촌지도자중앙회를 창립하고 농촌진흥청 지도사업에 관여하면서 교육연찬사업과 농촌지도자회보 발간, 우수농산물 품평회 개최, 새농촌 가꾸기운동 전개 등 순수한 농촌 진흥과 지도사업조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자원지도자들은 농민운동에 뜻을 두어 한국가톨릭농민회나 기독교농민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성격상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동일하여 많은 수의 회원들이 두 개의 조직에 중복가입되어 있었으며,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1968년 10월 사회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독농가단체로서 농업기술 개발과 연구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치적 단체로 정립되었다.

한편 농민운동에 관심을 갖고 농정연구조직으로 발족한 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는 정규적인 금요강좌와 단기교육과정을 설치하여 농업·농민·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학도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토론문화를 발전시켰다. 그 외에도 회지 발간과 연구조사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협업농장의 조사와 지원·육성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1975년에는 연구회내에 신용협동조합(푸른들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원간 저축과 공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근대화연구회원중 일부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대화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농민운동의 실천적 현실참여방법으로서 기독교농민회를 결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66년에 가톨릭노동청년회 농촌청년부에서 성장하여 창립된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는 그 활동을 강화해 오다가 1969년에는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성직자와 농촌사제들이 단합된 전국농촌사목협의회를 창립했고, 1972년에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의 조직과 운영을 재편하여 “한국가톨릭농민회”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톨릭농민회의 발전과 가톨릭계의 농촌현실참여활동은 기독교계의 민중선교영역으로 영향을 주어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내에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를 통해 기독교농민회의 발족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가톨릭농민회를 통해 신앙양심과 사회의식에 동화된 농민지도자들이 기독교농민회 발족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 당시 농민운동가의 교육기관적 역할을 해 왔던 크리스찬 아카데미 농민교육과 농업근대화 강좌를 통해 농업·농민문제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가톨릭농민회를 통해 농민운동에 참여하거나 농촌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농민 소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농촌분과위원회와 연계되면서 기독교농민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국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은 1974년에 발족했으며, 당시의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농촌청년들과 농촌지도자 및 대학생들의 사회교육을 통해 많은 농민운동가를 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은 곧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되었고 1979년에는 소위 “아카데미 사

그림 1-2 1970년대의 농민단체의 발전과정

- 1974.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개원
- 1978. 전남 기독교농민회 창립
- 1979.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발생
- 1980. 전북 기독교농민회 창립

건”을 통해 그 문을 닫게 되었다.

1977년 기독교청년협의회 농촌분과위원회와 연관을 갖고 농민운동의 기틀을 잡기 시작한 전남지역에서는 1978년초 해남군에서 전남 기독교농민회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를 이어 1979년 12월에는 한국기독교농민회 전국조직결성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이 준비위원회에서는 전국 조직 결성목표를 1982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1980년 5월에는 전북 기독교농민회가 만들어졌고, 1981년 3월에는 경북과 충북 기독교농민회가 만들어져 조직이 확대되게 되었다. 결국 1982년 3월 전국조직인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이 결성되었다.

1970년대 농민운동의 과제는 쌀 생산비조사, 추곡 수매가 인상, 농협의 민주화, 농지세 투쟁, 농지개량조합과의 싸움, 피해보상, 새마을사업 강제집행 거부투쟁 등이었다. 투쟁방법은 지역에서의 행정관서와의 싸움이거나, 준법투쟁, 경제투쟁의 범위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한 자생적 싸움이었다. 그러나 더욱 큰 싸움은 농민운동단체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의 정치적 압력과 조직내적 갈등과의 싸움이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에는 농업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톨릭과 기독교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운동이 크게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대다수 농민을 기반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서 일부 지식인이나 종교인 등 소수 활동가들에 의해 농민 권익을 주장하는데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 중심의 농민운동조직의 발달은 민간운동조직의 결성기반이 약한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치적 압력이 종교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동까지는 장악하지 못하고 민간운동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1980년대

3.1. 농업 여건

1980년대 전반기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1982~86)의 농정의 주요 당면과제는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복합영농시험사업, 농어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과 유통 근대화 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방향은 농산물의 수입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공급안정과 농공지구를 중심으로 한 농업소득의 증대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개방농업정책의 확충, 전개로 잡았다.

1980년대 전반기의 주요한 농업정책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제정이다. 문란해진 농지관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지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1986. 12. 31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제정(법률 제3888호)되었다. 둘째, 안정영농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주곡 자급화시책의 추진이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여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농촌구조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농업기반을 구축해 갔다. 또한 농지 보존과 농지 이용률 향상에 역점을 둔 시책이 전개되어 농지조성기금에 의해 간척농지 및 유흥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밖에 농업기계화시책 및 주곡 자급달성시책(식량작물의 우량종자 보급 확대, 농가의 증산의

육 증진 및 다수확기술의 확산) 등을 추진하였다. 셋째, 농가소득작목의 육성시책이다. 1982년에 소득증대 10대전략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작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1983년부터 시행된 복합영농시범사업에 채소와 과수생산을 복합영농시범사업과 연계시켜 채소류 출하조정 및 수매비축사업의 확대와 사과 수출 등 가격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주산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넷째, 소값 파동과 이에 따른 축산진흥시책의 추진이다. 1970년대 들어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축산물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으나 국내 생산기반이 빈약하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1983년에는 소값이 최고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축산관측업무가 강화되기도 하였으나 1984년부터는 소값 하락파동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1980~84년 기간에는 그 동안 농가소득작목으로 가장 인기 있던 소가 ‘병든 소 파동’, ‘소값 하락파동’ 등으로 농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준 결과가 되었다. 다섯째, 복합영농시범사업과 농어가 소득증대시책의 추진이다. 농어가 소득증대시책은 복합영농시범사업, 연근해어업의 진흥 및 농업외소득의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복합영농시범사업이 미맥 위주의 단순경영형태로는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어 소득원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추진되었다. 여섯째, 농촌공업 개발과 농외소득 증대사업의 추진이다. 1983년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농공지구방식에 의한 농촌공업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이는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공단을 조성해서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농어가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일곱째,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추진과 농산물유통제도의 개선이다. 1982. 10 농어촌개발법을 개정하여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꾀하였다. 농산물유통근대화시책으로는 산지협동출하조직 육성, 유통시설의 확충, 농산물 표준등급화 추진 및 농업통계의 실용화와 유통분산체계를 구축하였다. 여덟째, 국제수지 흑자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고조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졌다. 아홉째,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다. 농어촌 활성화시책으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이 1980년대 초부터 실시되었다. 열번째,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이다. 1986년에 ‘농어촌종합대책’을 추진하였는데,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함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시켜 산업간 균형성장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농외소득원의 개발 촉진, 농어촌 생활여건의 개선, 농어민 부채경감조치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부채경감대책을 시행하여 영농자금과 주택개량자금의 이자율을 연 10%에서 8%로 인하하고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지원규모도 확대하였다.

1980년대 후반은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87 ~ 91)이 추진된 시기이다. 이 기간의 기본목표는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으로서, 21세기에는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제1단계로 삼은 것이다. 한편 이 당시의 농정의 계획목표와 정책방향은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농어촌종합대책을 본격화하여 농어촌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정비함으로써 2000년대의 ‘선진화된 농어촌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과거 농정과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 농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농어민·농어촌을 함께 다루는 종합농정의 구현을 목표로 했다는 점이다.

이 기간에 추진된 주요 농업정책으로는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농어가 소득배가와 농어촌활성화 종합대책, 양곡유통위원회 설치와 이를 통한 추하곡 수매가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1986년부터 추진된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 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1987년에 실시하였다. 1조원의 제도금융을 통해 농어가의 고리사채를 공급용으로 전환시키고 농어가에 공급되는 각종 정책자금의 금리를 하향 조정함은 물론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1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정책당국은 물론 수혜대상인 농어민들조차도 단기적인 대책으로 농어가 부담을 경감시

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한편 낮은 농어가 소득과 불리한 농어촌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농공지구의 개발, 농어민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 영세농민에 대한 학자금 지원,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의 인하, 농지개량조합비 경감 등의 일련의 조치들이 농어촌종합대책(1986. 3. 5), 농어가부담경감대책(1987. 3. 16) 및 농어촌경제활성화 종합대책(1987. 12. 9) 등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또한 1988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및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특히, 1988년부터 추곡 수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각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하여 양곡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양곡유통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2 농민운동 실태

1970년대의 농민운동이 소수 활동가들에 의해 진행되던데 비해 1980년대의 농민운동은 1980년 광주사건을 계기로 1970년대와는 다른 운동양상을 띠게 되었다. 1980년대 농민운동은 대중조직화의 방향으로 운동의 방향을 잡아가는 한편, 종교적 형식을 빌리거나 소수의 선각자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것만으로는 생산현장의 마을에 있는 일반농민들의 지지나 참여를 얻어낼 수 없음을 인식하여 군단위의 구심을 갖춘 자주적 조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 초반인 1980~85년은 가농과 기농 등 종교적 농민운동단체들이 주도하는 농민운동의 격랑기였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 농민운동단체들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해체되거나 잠재위졌으며 다만 이들 종교계의 농민운동단체들만이 그 운동의 맥을 이어가고 있었으므로 정치적 압력의 강도도 높았고 운동가들의 구심력이 종교계 운동단체로 집중되므로써 그 저항도 만만치 않아 격랑이 일고 사건 발생도 많았던 시기였다. 농민운동가를 양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던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이 소위 아카데미 사건으로 인해 1979년에 문을

단았고 농업근대화연구회도 수백 회를 이어 온 금요강좌의 중단을 가져 왔으며, 1980년 12월에는 결국 정부의 강권에 의해 해산총회를 열고 사단법인을 해산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간 주도적인 농민운동의 뿌리는 1970년대 후반기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정치권의 강력한 제재에 의해 위축되었으며, 나머지 운동가들 대부분은 종교계의 운동단체인 가농이나 기농 및 진보적인 정치권으로 합류되었다. 농민들의 불만이나 농민운동가들의 활동은 종교계운동으로 집중되었고 정치권의 진보적 정치단체와의 연대적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초 농민운동단체들의 움직임은 보면 1982년에 한국기독교 농민회총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1983년에는 충남 기독교농민회가 만들어졌고 조직이 확대 정비되었으며, 1984년에는 한국농민선교협회의 이사회를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이사회로 바꾸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민운동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들을 통해 농민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독교농민회나 가톨릭농민회 또는 독자적인 조직 확대방향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농민운동조직의 결성은 지역단위 농민운동조직을 중시하게 되었고 군단위의 농민운동 조직 결성방식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민주적 농민운동단체들의 지역조직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농민운동의 민주성 회복, 즉 종교적 성격의 농민운동단체가 주도해 온 농민운동을 대중적 농민단체가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장은 가톨릭농민회의 1987년도 성직자 회의인 주교회의에서 가톨릭농민회와 가톨릭대학생연합회가 광범위한 민주운동세력들과 연대하는 것을 제재하고 교회내로 운동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정적으로 대중적 농민운동단체의 출발을 촉구하는 결과가 된다. 이 당시 가톨릭 주교회가 결정한 활동제한 내용은, ① 모든 교회활동은 교구단위를 중심으로 하고 전국단위조직은 해체한다 ② 모든 회원은 신자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림 1-3 1980년대의 농민단체의 발전과정

- | | | |
|---------|------------------------------|-------------|
| ○ 1982. |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 창설 | |
| - 1989. | 한국기독교농민회로 개칭 | |
| ○ 1987. | 전국농민협회 창설 |] 전국농민회로 통합 |
| ○ 1989. | 전국농민운동연합 창설 | |
| ○ 1990. | 전국농민회총연맹 창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창설 | |

었다. 이와 같은 결정이 천주교내의 공식적인 합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농민운동가나 농민단체에게는 농민운동이 종교적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한편의 주장을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농민운동의 사회적 배경은 1987년에 순수한 농민운동단체인 전국농민협회를 만들게 되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가 주도하고 있던 선교적 농민운동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일반농민들의 자주적 농민운동단체를 주장하는 농민운동가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가톨릭농민회에 소속되어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나 기독교농민회에 소속되어 농민운동을 주도해 왔던 운동가들의 대부분이 반종교적 성격보다는 친종교적인 민간주도형 농민운동단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면서 1989년 3월 전국농민운동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민간주도형 농민운동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농업생산자단체와 협의체, 농촌지도, 교육홍보단체 등도 농민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조직력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1989년 9월 농민단체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결성하였다.

1980년대의 주요한 농민운동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가톨릭농민회가 주도한 충북 음성지역의 '부당농지세 시정운동'(1982년)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농민들의 불만의 대상이던 농지세에 대한 반응으로써 1983년 가을에는 전남 구례를 중심으로 한 '농지세 및 수리조합비 현

물납부운동'이 일어났다. 다른 한편 1984.9.2에는 함평·무안 농민대회가 열리고 이듬해인 1985.4.1에는 함평 가농과 기농이 통합하여 '함평 농우회'가 창립되는 등 농민조직의 대중조직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1985.7부터 1986.2까지 전국적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소값 피해보상운동(소몰이싸움)이 벌어졌다. 1986년 이후에는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1986.4.19에는 무안에서, 1986.5.17에는 함평에서 수입개방 저지 및 수입정권 타도를 위한 농민집회가 열렸다.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 들어 농민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운동의 이슈는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의외에 토지문제, 수세문제 및 생산비보장 등 광범위하였다. 토지문제에 대한 것으로는 1987.8의 '삼양사 토지양도운동'이 대표적이다. 한편 1980년대초부터 제기돼 온 수세납부 거부운동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전개되었다. 1987.9.11 해남에서는 수세납부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1987.11.26에는 해남 수세거부 농민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활동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1988.2.13에는 고추 생산비보장운동과 농축산물 수입개방반대운동과 결합하여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또한 1988.11.17에는 여의도에서 전국 14개 농업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농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89.10.25에는 '쌀 생산비 투쟁,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전국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말의 농민운동의 특징이라면 개별 농민단체차원에서 전개되기보다는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농민단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와 농민운동단체들의 연대조직인 전국농민단체협의회나 정부의 영농후계자육성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전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도 농민운동단체인 전농이나 전여농 등과 함께 농민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운동적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민단체들의 연합 활동 분위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농민운동의

방향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당면문제(농지세, 수세, 소값보상, 토지양도 등)에서 점차 농업정책의 전반적이고 대외정책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4. 1990년대(최근)

4. 1. 농업 여건

1990년대 들어 한때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그 규모도 점차 커지는 등 우리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또한 1993.12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따라서 농업과 관련된 경제사정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였으며 농업에 대한 시각도 많이 변화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시되는 가운데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농업의 패배의식도 팽배하였다. 1990년대초의 이러한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농업관련 대책 및 정책이 수립·추진되었다.

1989. 4. 28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1990. 4. 7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법률안 제4228호)이 제정되고, 1990. 5. 18에는 정부(농림수산부)가 당면 농어촌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뒤이어 1991. 7에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책에서는 우리 나라 농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우루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대폭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두고, 향후 10년을 '농어촌구조개선의 년대'로 설정, 과감한 투자와 폭 넓은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1992 ~ 2001년 기간의 10년간 42조원의 투융자계획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볼 때 1989년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1년의 농업구조 개선대책 등은 별개의 대책이 아니라 신농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추진되는 가운데 1992. 12. 8 민자당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은 ‘나의 「신농정」구상’을 통해 자신의 농정구상을 발표했는데, 이는 문민정부의 농정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바침하기 위하여 1993년에는 신농정계획이 수립되고, 1994년에는 신농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설치·운영되기도 하였다.

4. 2 농민운동 실태

농민운동단체들의 움직임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통합된 민간 주도형 농민운동단체의 결성을 추진하여 1987년에 만들어진 전국농민협회와 1989년에 만들어진 전국농민운동연합 그리고 각 군단위로 만들어져 어느 쪽에도 가입을 유보하면서 통합된 조직을 추구하고 있던 독자적인 농민단체들이 동조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창설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가톨릭 농촌여성농민회를 주축으로 연합체를 추구해 오던 여성농민운동가들도 기독교농민회 여성위원회와 연합하면서 1990년 4월 전국농민회총연맹 창설과 동시에 전국여성농민회로 독립·발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농민회를 뒷받침해 왔던 가톨릭농민회와 한국기독교농민회는 각각 종교단체로서의 농촌문제 참여라는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가톨릭농민회는 1990년도 제20차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생명운동과 공동체운동의 방향으로 ‘가농’의 새로운 진로를 정했고 점차 우리 밀 살리기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한국기독교농민회도 그 동안의 농민운동은 대중조직적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간주하고 단일화된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그 성과를 수렴키로 했으며 정의, 생명, 공동체운동을 향한 농민선교단체로서 제2의 새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다.

그림 1-4 1990년대의 농민운동 관련 단체 현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한국가톨릭농민회
- 한국기독교농민회
- 전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 전국농민단체협의회(11개단체)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포도회, 한국유기농환경연구회, 한국육우회, 한국양록협회, 정농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농민운동의 내용을 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 여부가 농정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따라서 농민운동 단체의 모든 활동도 여기에 집중되었다. 또한 농민운동도 과거의 대안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비해 논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활동 방법도 개별 조직별로 추진하기보다는 관련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한 형태로 대부분 전개되었다. 즉, 1980년대말 분립되어 있던 농민운동단체들이 개별적인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각 농민단체들이 공동주최의 형식으로 전개해 나갔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농민단체들의 활동은 대부분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및 UR협상 거부와 관련지어 추진되었다. 그동안 농정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오던 농협은 'UR협상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를 가트 집행부에 전달하는가 하면 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농산물개방협상 반대 결의대회를 지방과 중앙에서 수십 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정이 체결된 1993년 말부터는 재협상 요구 및 UR협상 국회 비준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는

데, 1994. 2. 1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집회를 가졌다. 이외에 주요한 농민단체의 활동으로는 추곡 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확대, 지역의료보험 개선, 앞담배 수매문제 등 농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를 비롯하여 골프장 건설 반대, 핵 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등 농촌환경보호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제 2 장

한국가톨릭농민회

1. 설립 배경

한국가톨릭농민회의 결성은 1964년에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안에 농촌청년부를 설치한 데서 비롯되었다.

농촌청년부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안에 설치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1년 5·16 군사정부가 출범한 후 농업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농촌고리채정리법을 공포·시행하고 농업협동조합을 발족하였다. 그러나 농업 개발에 대한 관심은 공업화를 강조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갔다. 또한 농촌고리채를 정리하고 그 대신 농협을 통하여 유리한 농업자금을 증액하려던 당초의 의도도 공업화에 밀려 축소되어 갔다. 식량 자급률도 해마다 낮아졌고, 부족한 식량은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대체되면서 농업생산력의 정체를 빚어왔다. 따라서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은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하강분해를 촉진시키게 되었으며, 해마다 다수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농하게 되었다.

한편 1960년대를 전후하여 교회 내부에서도 엄청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났다. 1958년에는 한국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발족되어 한국교회안에서도 민중의 삶과 삶의 현장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주교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를 중심으로 도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하던 도시 노동자들 중에는 이농한 농촌 출신자들이 다수 있어 도시 노동문제도 결국 농촌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안에 농촌청년부를 1964년에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촌청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노동청년회의 1개 부서 활동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1966년 8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 평의회는 농촌청년부를 노동청년회와 완전 분리·독립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10월 17일 구미에서 전국 남녀 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 창립총회를 열고, 그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다.

2. 조직 목적과 활동 방향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는 농민의 근본문제를 농민이 스스로, 농민과 더불어 해결해 나갈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농민의 경제적 정의 구현, 농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 전체 농민의 단결과 공동활동을 위한 조직 강화 및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농민문화의 재창조와 공동체적 삶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활동목표를 세웠다.

1971년 11월에는 한국가톨릭농민회로 개칭하고 그 목적을 “농민 스스로의 단결과 협력으로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한 농민사회의 복음화와 인류공동체 발전

에 기여함”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방향을, ① 농민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발전을 위한 공동활동, ② 농민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회원 훈련, ③ 농업문제와 농민운동에 대한 조사연구, ④ 농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본회 활동을 홍보·선전하는 활동, ⑤ 사회와 교회 발전을 위한 활동, ⑥ 국제적 유대 협력활동, ⑦ 기타 본회에 부합되는 활동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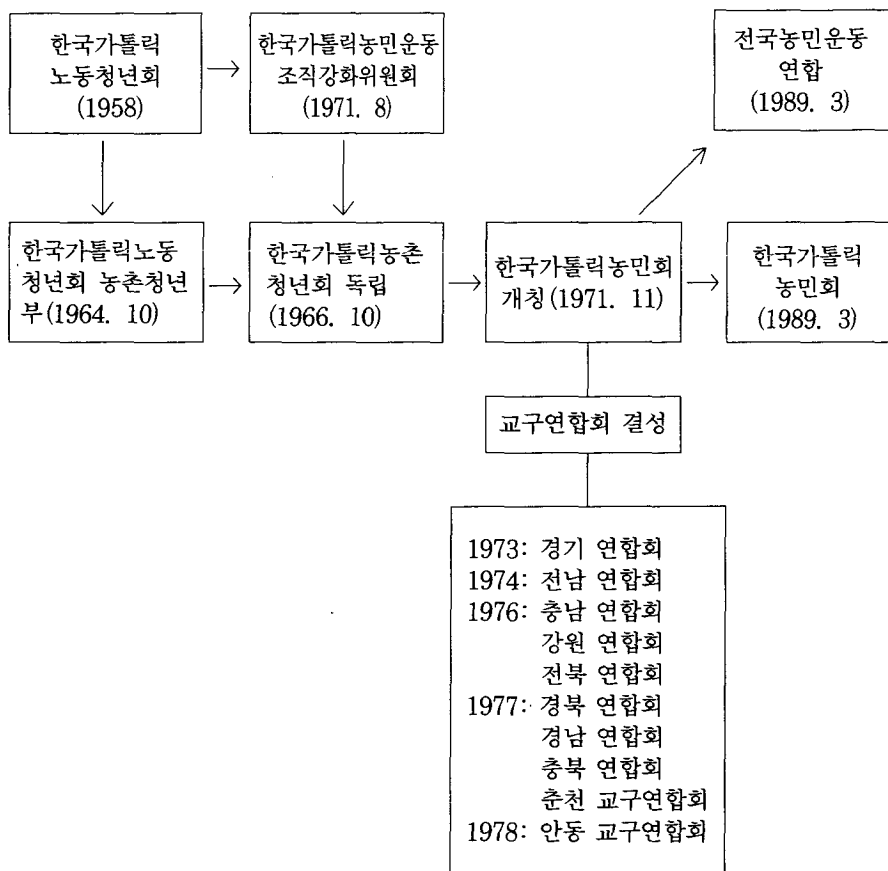
그러나 1988년에 한국가톨릭농민회는 기존의 농민운동단체들이 각기 수행해 온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권익활동을 총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민회총연맹에 합류기로 함에 따라 그 위상을 종교적 성격과 농민운동적 성격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하였다. 그에 따라 조직목적을 “농민 스스로의 각성과 협동으로 생명존중과 공동체 삶의 실천을 통해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하고 농민과 거래의 복음화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재정립하였다. 활동 방향도, ① 사람과 땅을 비롯한 자연을 살리는 생명농업의 실천, ② 서로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 활동, ③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나 나누는 직거래 활동, ④ 마음과 몸을 튼튼히 하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심신 수련 및 생활건강활동, ⑤ 농촌사회와 거래의 복음화를 위한 농민사목활동, ⑥ 반생명적인 모든 체제, 구조, 문명, 생활양식을 극복, 개선하기 위한 활동, ⑦ 국내외 유관단체들(민족민주운동과 전체 농민운동 등)과의 연대활동, ⑧ 이상의 활동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교육훈련, 조사연구, 홍보활동으로 하였다.

3. 조직화과정

한국가톨릭농민회가 1964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내의 농촌청년부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조직화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교구

를 중심으로 연합회를 결성하고, 또 각 교구별로 지도신부단을 두어 지원하면서 한국가톨릭농민회를 교회의 공식단체로 인준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2-1)은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조직화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조직화과정



한국가톨릭농민회의 모체는 1964년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산하부서로서 결성된 농촌청년부이다. 이 농촌청년부가 2년후인 1966년에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로 독립되었고, 경북 구미에 전국 본부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 11월에 한국가톨릭농민회로 개칭되었다.

한국가톨릭농민회로의 개칭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회칙을 1972년 4월에 제정하였고, 나아가 새조직질서를 확립하면서 조직도 확대해 나갔다. 1973년에는 경기 연합회가, 1974년에는 전남 연합회가 각각 결성되었다. 1975년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춘계 총회에서 한국가톨릭농민회 육성을 각 교구에서 지원키로 결정하였고, 동년 9월에 각 교구별로 지도신부단이 결성되었다. 1976년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춘계 총회에서 한국가톨릭농민회를 교회 공식단체로 인준하는 등 교회의 뒷받침이 강화됨과 동시에 조직의 확장과 업무가 증대함에 따라 본부 사무실을 구미에서 대전의 가톨릭 문화회관으로 이전하였다.

1977년에는 충북, 춘천(강원 연합회가 원주와 춘천 연합회로 독립발전), 경북, 경남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1978년에는 안동 연합회가 만들어져 경북 연합회가 대구와 안동 연합회로 독립·발전하였다.

한편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조직활동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기 위한 내부조직의 개편이 있었다. 1977년에는 여성농민의 농민운동 참여 촉발을 위해 부녀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1978년부터는 전국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1987년에는 주교회의에서 한국가톨릭농민회의 회원은 신자이어야 할 것과 전국 본부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국지도신부단과 관련 단체에서 적극 노력하여 이 결정의 배경, 동기가 한국가톨릭농민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나 교회와의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에는 농민운동 통일사업이 진전되어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기타 독자적 군 농민회 등 90여개의 군 농민회 조직이

참여하는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결성되었다. 이에 한국가톨릭농민회는 당시에 농민운동이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만 모든 농어민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해 왔던 세력을 중심으로 농민운동 통일사업에 힘을 쏟는 한편, 나머지 회원들은 향후 새로운 전국단일 농민조직의 건설에 맞춰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새로운 위상 정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에는 조직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위원회사업을 실시해 군단위 중심활동가 양성에 주력하였고, 군 협의회를 군 농민회로 개편하였다.

1990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새로운 전국단일 농민조직의 출범을 눈 앞에 두었다. 이에 따라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종교적 농민운동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이 땅에 생명과 해방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새로운 생명공동체 운동조직으로 전환하고 각급 지역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4 운영체계와 주요 활동

4. 1. 운영체계

한국가톨릭농민회는 1990년을 전후하여 조직체계와 운영에서 변화를 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1988년에 각기 농민단체들이 수행해 온 대정부 교섭역할이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흡수·통합됨에 따른 역할 재정립에서 기인되었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계는 (그림 2-2)와 같다. 우선 조직 구성을 보면, ① 분회(운동과 생활의 협동체로서 마을단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역에 둬), ② 협의회(분회 운동 실천의 기본조직으로서 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역에 둬), ③ 연합회(지방운동의 관리, 조정기구로서 도 또는 그에 상응하

는 지역에 둬), ④ 전국 본부(최고 의결집행기구로서 대의원 총회, 회장단, 이사회, 감사회, 사무국으로 구성)의 4단계로 되어 있었다.

운영체계로는, ① 대의원 총회, ② 이사회, ③ 감사회, ④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① 본회 운동 방향과 원칙의 결정, ② 활동 및 재정의 목표와 방침 수립, ③ 활동 및 재정보고의 승인, ④ 감사보고의 승인, ⑤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⑥ 회칙의 개편, ⑦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을 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대의원 총회 휴회중 이를 대행하는 상설 의결기구로서 그 기능은, ① 대의원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② 회원 가입 및 각급 조직의 승인과 취소, ③ 사무국장의 선임 및 해임, ④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⑤ 활동계획 및 예산 수립, ⑥ 결산 심의, ⑦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사업을 결정한다.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5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회는 본회 사업과 업무 전반에 걸쳐 최소한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국은 상설 집행기구로서 그 기능은, ①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② 조직 훈련, ③ 조사기획 선전, ④ 회원 및 지방조직 상호간의 협력과 유대 조성, ⑤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활동, ⑥ 기타 본회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은 운영체계는 농민운동단체로서의 한국가톨릭농민회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말까지의 농민운동 총본산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에 상응하는 형태였다. 그러던 것이 1990년 농민대중조직의 운동단체가 종교적 그늘에서 벗어나 통합조직인 전농을 탄생시키므로 한국가톨릭농민회는 본래의 종교적 농민운동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전국 본부를 중앙협의회로 하고 중앙협의회 사무국 산하에는 지역 연합회 대신 교구별 농민회

와 본당별 농민회를 두었으며, 최말단조직으로는 생활협동반을 분회로서 구성하는 가톨릭 교구 운영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그림 2-3).

그림 2-2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조직 운영체계(1971~8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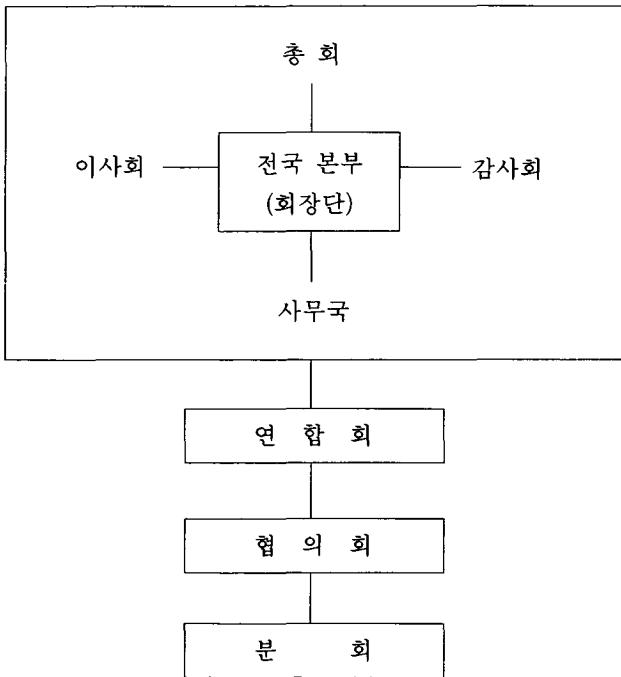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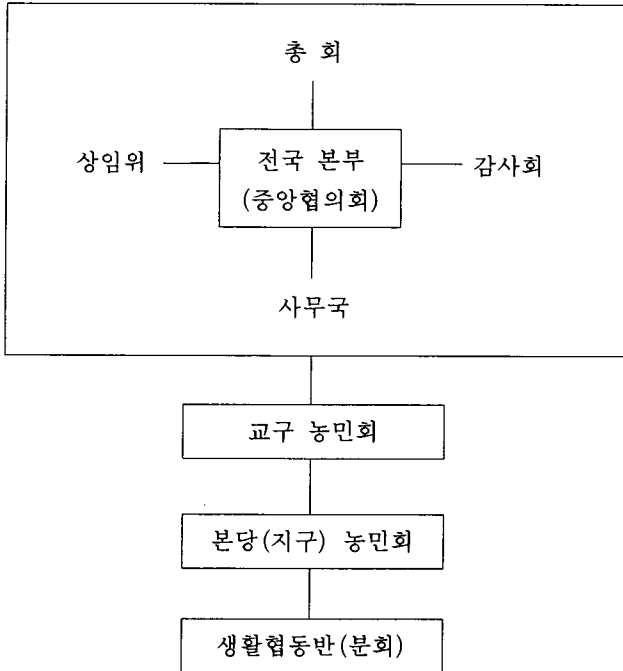


그림 2-3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조직 운영체계(1990년~)



4.2. 주요 활동 상황

4.2.1. 활동분야

한국가톨릭농민회는 그 조직목적에서 표방했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여왔다. 지금까지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수행해 온 활동내용을 범주화하면 대체로 10여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4.2.1.1. 농민의 경제적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

농민의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고 나아가 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키

위해서는 농업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농업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고 또 농산물 값을 제대로 받으며, 영농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그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농업의 기본 생산수단인 토지가 비농민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영세한 규모의 농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생산의 협동화와 구판, 이용, 신용사업 등에 걸친 협동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영농의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 보장과 소비자로서의 농민에 대한 보호활동, 부당한 농업세금에 대한 시정활동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농민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4.2.1.2. 농촌사회 민주화활동

농민이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으면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촌사회에 잔존하는 봉건적 요소가 청산되고 나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농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부락운영의 민주화를 지향하며, 농협 등 농민관계조합이 농민의 이익을 위하고 또 농민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민의 농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농민단체조합장의 직선제요구와 민주적 운영의 요구활동 등을 들 수 있다.

4.2.1.3. 봉사활동

마을은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조직에서 기본적 중심단위로서 운동과 생활의 기초협동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을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이 서로 돕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가톨릭농민회는 마을

을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주민간의 일손돕기, 애경사에 협력, 영농정보 교환 제공, 경로활동, 극빈자 돕기 등을 통하여 부락민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을 벌였다.

4.2.1.4. 문화활동

생산과 문화, 일과 전례의 일치를 시도함으로써 인간다운 공동체문화를 창조하고 나아가 건전한 농민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농촌에 유입되는 소비문화,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를 배척하고 농민이 무력감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산문화를 되찾게 하기 위한 활동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농악놀이, 율놀이, 대보름행사 등 민속놀이이며, 생산문화인 농민문화를 되살리는 활동을 통해 서로 일체감을 느끼며, 농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농민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바르게 나타냄으로써 건전한 농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다.

4.2.1.5. 조직활동

농민문제 해결은 농민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전개되도록 하고 나아가 더 많은 농민이 이 운동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조직활동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한국가톨릭농민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조직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분회 회합의 정기적 실시와 점검·지도, 지역 협의회 구성·운영, 연합회 임원들의 책임 분담과 기능 강화, 각급 조직의 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4.2.1.6. 교육활동

농민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원인을 함께 찾고, 농민이 사회 발전에 있어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를 바로 알아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 현장교육, 지도자 훈련, 분회장 연수, 임원 연수 등의 교육활동을 벌였다.

4.2.1.7. 조사·연구활동

농촌의 현실문제를 과학적으로 조사·연구·분석하여 활동의 기초자료로 삼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조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쌀 생산비 조사, 농민의식 조사, 감류농지세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4.2.1.8. 홍보·출판활동

조직의 활동과 농민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발행, 보급하고 농민의 주장을 대변, 선전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민회 소식지의 발간, 농민회 소개 팜플렛 제작·배포, 쌀 생산비 조사 및 농지임차관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등의 발간과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입장을 천명하는 성명서 및 건의서의 발표 등을 들 수 있다.

4.2.1.9. 부녀활동

농촌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고 농민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조직 및 협동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이다.

4.2.1.10. 교회 유관단체와의 협력활동

교회, 사회단체, 농촌 유관기관 및 단체, 외국 운동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이다.

4.2.2. 성장단계별 시기 구분

한국가톨릭농민회가 1964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산하 1개 부서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온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조직체의 성장단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았다. 물론 이러한 시기 구분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지만 지난 30여년간 급격한 안팎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또 이에 대응하는 가운데 자체적인 변신을 하여 왔으므로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와 농민운동의 발족, 정착, 적응과정을 연계·정리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다.

4.2.2.1. 태동기(1964. 10 ~ 1971)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의 농촌청년부로 출발해서,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를 중심으로 착한 사람, 착한 생활, 모범농사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였던 시기로서 주로 종교, 기술, 생활면의 교육에 치중했다. 태동기의 활동은 농민운동이라기 보다는 농촌 계몽활동의 성격이 강하였다.

4.2.2.2. 성장기(1972 ~ 1980. 5)

공업화과정을 통해 야기된 농업·농민문제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이들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로 새출발하였지만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농민운동활동의 뿌리를 내렸던 시기였다.

4.2.2.3. 성숙기(1980. 5 ~ 1987)

한국가톨릭농민회가 1970년대를 통해 농민운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활동 내용에 있어서의 미비점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그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면서 그 운동 방향을 농민구원·겨레구원·인류구원·우주구원으로 설정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했다.

4.2.2.4. 새로운 출발(1988 ~)

농민운동 통일사업에 의해 기존의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및 독자적 농민회가 전국 단일 농민조직으로 새롭게 통합되어 갔다. 이에 따라 한국가톨릭농민회도 각급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그 활동 방향을 생명운동, 생활공동체운동으로 전환하였다.

4.2.3. 성장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

먼저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성장단계별로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태동기에서 새로운 출발기에 이르기까지의 활동 목표 및 방향과 그에 따른 주요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태동기에는 활동목표를 조직의 강화와 농민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초점을 두고 모범농장과 모범청소년의 양성에 주력하면서 협업농장과 협업양돈장을 경영하고 또한 이를 위한 교육활동을 하였다. 성장기에는 활동목표를 농협의 민주화와 현장활동의 강화에 두고 농협의 민주화를 위한 조사연구활동과 더불어 농업협동화사업과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성숙기에는 활동목표를 반농민적 정책 및 제도의 철폐와 농산물가격 보장, 농촌사회의 민주화에 두고 농림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와 강제행정 거부를 비롯하여 농민 관계 조합의 부조리 시정, 농산물 수입 반대 등의 권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새로운 출발기에는 활동목표를 농민운동의 통일사업 지원과 생명공동체운동의 토대 구축에 두고 농산물 수입반대, 수세 거부운동 등의 권익활동과 생활공동체운동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실행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활동 상황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성장단계별 주요 활동 목표와 활동 내용

성장단계별	활 동 목 표	주 요 활 동
태 동 기	○ 농민의 경제적 정의 구현 ○ 농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 ○ 농민의 단결을 위한 조직 강화	○ 조사연구활동: 농촌문제와 가톨릭활동에 관한 세미나 ○ 교육활동: 아학 ○ 홍보활동: 농촌청년회지 발간
성 장 기	○ 농협의 민주화 ○ 농촌 현장활동 강화 ○ 조직의 활성화	○ 조사연구활동: 쌀 생산비조사 ○ 민주화 활동: 농협 민주화 ○ 농업협동활동: 작목별 협동생산 및 신용조합 운영 ○ 교육활동: 농민 및 지도자 강습회, 농지 및 생산비 조사원 교육, 농촌선교세미나 등 ○ 권익실천활동: 농협 강제출자 거부,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 ○ 홍보 및 집회활동: 쌀 생산비 보고대회
성 숙 기	○ 농민의 존엄성 회복 ○ 농촌사회의 민주화 ○ 농산물가격 보장 ○ 반농민적 정책, 제도 철폐 ○ 생활공동체 기반 구축 ○ 지역운동 확대 강화	○ 조사연구: 농림관계법령위원회, 농민조세공과금 실태조사 등 ○ 농업협동화활동: 생산, 신용, 구관, 이용사업 ○ 문화활동: 풍물패 조직, 대동제 실시 ○ 민주화활동: 농민 관련 조합의 민주화, 농조 해체 및 수세 거부 ○ 교육활동: 부녀회원 교육, 농민신문 발행 ○ 권익활동: 강제행정 거부, 농민관계 조합 부조리 시정, 농지세 시정 등 ○ 홍보집회: 전국농민대회, 농산물 수입반대 대회
새로운 출 발	○ 농민운동 통일사업 지원 ○ 생명공동체운동 토대 구축	○ 권익활동: 수입개방저지, 수세거부, 의료 보험 개선 ○ 조직활동: 농민운동의 통일사업에 참여와 조직개편 ○ 생활공동체운동: 생활협동반, 소비자공동체 ○ 실행위원회활동: 유기농업위원회, 생활건강위원회, 여성활동위원회, 유통사업위원회 조직과 각 위원회 별 활동

4.2.3.1. 태동기

태동기 활동은,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J. A. C.) 시절(1964. 10~1969)과, 운동의 새 방향을 모색하며 “한국가톨릭농민회”로 발돋움하던 시절(1970~71)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 시절의 주요 활동으로는 야학(1967), 협업양계(1967), 신용협동조합, 협업농장(1968), 협업양돈장 경영(1968)을 들 수 있다. 1966년부터 전국 단위의 농촌지도자 교육에 착수,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에 주력했다. 1968년 4월에는 회지「농촌청년」창간호 및 기타 자료를 발행하고, 1968년부터는 성직자들의 농촌사목활동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농촌 성직자 세미나’를 개최(1968~71, 3회)했다. 이 시기의 활동의 성격은 농촌 청년들에게 크리스찬 정신을 교육하여 모범 농촌청년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모범농장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능력과 지도자적 자질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구조, 개인과 정치·경제구조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한, 농촌·농민문제는 모범 농촌청년의 양성과 모범농장을 만드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았다.

그리하여 1970~71년은 운동의 변화를 위한 작업들이 이뤄졌다. 1970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농촌교회 신자단체 현황조사(84개 본당대상)를 하고 농촌 사목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1970년 8월에는 “농업·농촌문제와 가톨릭의 농촌활동”, “사회요구에 대답하는 크리스찬의 역할”을 주제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였다. 1971년 8월에는 “잉여농산물과 한국 농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의 개최를 통하여 농업·농민문제의 해결은 농민의 주체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농민운동의 방향은 농민 스스로 그리고 함께 농업·농민의 근본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구체적 활동목표를, ① 농민의 경제적 정의 구현, ② 농민의 사회적 지위 향상, ③ 전농민의

단결과 공동활동을 위한 조직 강화 및 확대에 하였다.

1971년 11월에는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 조직과 운영을 재편성 강화하기로 하고, 활동목표를 ① 농민 권익 옹호, ②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하며, 조직 명칭도 “한국가톨릭농민회”로 바꾸기로 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가톨릭농민회가 농민운동체로서 큰 걸음을 내딛는 변혁이었다.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으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농민운동의 첫 걸음이었다.

4.2.3.2. 성장기

성장기는 운동 방향을 정립하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농업·농민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시기(1972~76)와 수난속에서 성장한 시기(1977~1980. 5)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72~76년은 활동목표를 “농협의 민주화”, “농협의 협동화 및 조직의 정비 강화”에 두고, 활동 방향을 농민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두었다.

1977 ~ 80년은 정책활동 및 권익 실천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로서 수난도 많았으나 그만큼 농민운동이 뿌리를 내려가는 시기였다. 농민운동사에 길이 기억될 사례로서 “함평 고구마사건과” “안동 농민회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때였다.

활동목표를 “현장활동 강화 및 조직의 활성화”, “분회 중심의 현장활동 강화 및 전회원의 활성화”, “분회 중심활동 강화, 쌀 생산비 쟁취 및 민주농협 실현”에 두었다. 성장기에는 이러한 활동목표를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현장에서 또는 전국단위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1) 조사연구활동

○ 농업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농협의 반농민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전국 60개 지역에서 농협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가졌으며, 농협문제에 관한 전국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계엄령 등으로 연기되었다(1972).

○ 농지임차관계 실태조사: 1974년 2월부터 8월까지 9개 시·도, 62개 군, 70개 마을, 4,554호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민간단체가 수행한 최초의 농지조사였다.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이 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 쌀 생산비조사: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실시한 쌀 생산비 조사치는 표본 선정이나 토지용역비 계상방법 등에 있어서 정부당국의 공식발표치와 큰 격차를 보여 설득력은 없었지만 이 조사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문제를 제기했다. 민간단체가 한 최초의 생산비 조사로써 1975년 11월 쌀 생산비조사보고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전국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비료수급 실태조사(1974)를 실시했고, 전국 49개 농협 단위조합에 대한 실태조사(1976)를 실시했다.

○ 매년 해온 쌀 생산비에 대한 조사 이외에도 1978년에는 보리·담배·고추·옥수수에 대한 생산비조사를 하였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1978)와 농민의식조사(1979년 1,011명 대상) 및 잡류 농지세에 대한 실태조사(1979), 노풍피해 실태조사(1979) 등을 실시했다.

(2) 민주화활동

○ 농협 민주화활동: 1977년에는 농협 및 조합원 실태조사(8개 도, 46개 군, 75개 단협, 785 조합원 대상)와 농협문제에 대한 전국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농협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1977년에는 31개 조합, 1978년에는 64개 조합을 대상으로 강제출자 거부 및 이의 시정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비료 조별판매, 비료 및 농약 강제판매에 대한 거부 및 시정활동과 추곡 구매대금 강제 예치(대금의 20퍼센트로 6개월간 예치 강요) 거부활동 등을 했고, 전국 20개 분회가 특별 선정되어 농협 민주화에 대한 활동을 벌였으며(1978), 농협임원의 민주적인 선출을 위한 노력 및 회원 자신이 농협 임원으로 참여하여 조합 운영을 민주화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전개했다(1978년부터).

(3) 교육활동

농민 강습회(21회), 지도자 강습회(9회), 양돈 관계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1회), 현장교육(23회) 등을 비롯하여 지도자 훈련회, 농지 및 생산비 조사원 교육, 간부 연찬, 농민강습, 선정마을 교육, 실무자 교육, 농촌선교 세미나 등 총 164회에 걸쳐 4,055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활동은, 특히 1976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97회 2,271명).

회원교육은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다. 3년간 총 57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어려웠던 1979년도에 가장 활발한 교육활동이 전개되었으며(174회), 수난으로 인한 탈퇴회원이 더러 있었으나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입회자 수를 기록했다. 부녀활동은 주로 교육·홍보활동에 치중했으며, 건강·소비조합에 대한 연구활동을 했다.

(4) 농업협동화활동

○ 농업의 협동화를 위해 분회를 중심으로 현장조직단위에서의 생산·유통·이용부분의 협동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외에도 전국양돈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지원하였고, 낙동강 유역 및 원주지역 재해복구를 위한 협동사업도 지원하였다(1972~73).

1974년에는 작목별 협동활동(채소, 양돈, 양계, 양잠, 양묘, 한우, 비육우)을 벌였고, 3개 마을에 대한 개발사업과 양돈조합 전국연합회 지원활동 등을 했다. 1975년부터 전회원의 과제 실천을 강화하면서 전회원의 50퍼센트, 분회의 70퍼센트가 과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토록 했다. 6개 지역에서 공동작업·공동구판매활동을 했으며, 104개의 신용협동조합을 조직했고, 효소농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또한 9개의 선정마을을 정밀조사 분석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마을 대표자에게 교육을 하는 등 마을협동활동을 강화했다. 1976년에도, 특히 생산협동·신용협동(신협·양곡조합의 조직 및 육성)·공동구판매활동을 강화했다.

1977년에는 48개 지역에서 신용협동활동과 9개지역에서 구판협동활동 및 23개 지역에서 생산협동 활동을 하였다. 1978년에는 이러한 협동활동이 각각 57개 지역, 23개 지역, 44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또한 공동이용 사업, 상비약 공동활용, 특히 호남지역에서 효소농법 보급 및 실천활동이 확산되었다.

(5) 권익 실천활동

○ 구미지역에서 비싸게 농가에 공급한 하우스용 파이프에 대한 가격 반환을 공급회사를 상대로 벌여 관철시켰으며, 안성에서 경지정리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키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장 농민들을 지원하고 홍보활동을 벌였다(1972~73). 1972년에는 「농촌청년」지에 김추기경의 부활절 메시지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회지를 압수당하기도 하였다.

○ 농협 강제출자 거부, 통일벼 단지 부정 항의, 보리 피해보상, 농업노동자 권익 보호(1975년), 경지정리 피해보상, 부당수세 시정, 신품종 벼 피해보상(1976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 신품종 벼 강제권장(1977~79년에 가장 심함), 일반벼 재배 제재, 강권적인 초가지붕 개량과 주택개량사업(1978년에 가장 심함), 경지정리 및 객토사업, 하곡 및 추곡 수매량 제한 및 수매부정 문제, 부당한 하천 사용료와 부실경지정리 피해문제, 수몰지역 피해와 노풍 피해문제, 부당한 수세 및 을류 농지세 부과문제,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의 반대 등을 위한 시정 및 보상활동을 전개했다.

○ 함평 고구마사건: 1976년 가을, 농협이 함평 농민들과의 절간고구마 수매계약을 이행치 않아 고구마가 길거리에서 썩게 되었다. 고구마가 길거리에서 썩는 것은 이 땅의 농민권익이 짓밟히는 것과 같다는 자각 아래 함평 가톨릭농민회원들은 지역 피해농민들과 함께 철저한 피해 진상조사를 거쳐 피해보상 요구운동을 시작했다. 사건 발생 2년째인 1978년 4월, 광주 북동성당에서의 기도회 및 무기한 단식농성투쟁 결과 부정의 전말이 드러나고 농민들은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

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4개 도의 농협이 주정회사와 결탁하여 주정용 절간고구마 수매자금 80억원을 유용한 부정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 춘천 농민회사건: 1978년 춘천 연합회에서 농민회를 소개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농민회 간부 3명이 구속된 사건으로서 농민회 조직에 대한 제재의 첫 사례이었다.

○ 생산비 보장활동: 쌀 생산비 조사, 추곡 수매에 대한 건의 및 성명, 추곡 수매 및 노풍 피해에 대한 기자회견(1978),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서명(1977년 2만여 명, 1978년 5만 2천여 명), 생산자 대회를 통해 생산자 의식 고취와 생산비 보장활동을 전개했다.

○ 안동 농민회사건(세칭 오원춘 사건): 1978년 경북 영양군 청기면 농민들이 군 및 농협이 알선한 감자씨(시마바라)를 심었으나 싹도 나지 않아 감자농사를 망치게 되었다. 안동 농민회 청기분회 회원들은 피해 농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고,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당국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과 농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 농민들을 설득하면서 보상요구를 저지하려 했다. 그 결과 비회원 농민들은 중도에서 권리포기를 하고 말았으나, 회원 농민들의 끈질긴 보상요구활동과 안동교구 사제단의 지원으로 생각보다 빨리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 보상활동에 앞장섰던 청기분회장 오원춘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실이 안동교구 연합회 및 안동교구 사제단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농촌교구인 안동교구에 의하여 7월 17일 전국에 알려졌다. 곧 이어 관련 신부 및 농민회 간부들의 구속사태가 벌어졌고 대통령의 특별조사령이 내려졌으며,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되었다. 단식기도, 전국기도회, 가두 촛불 데모, 공정재판 요구 및 집단방청 활동, 전국회장 최병욱씨 구속 등이 뒤따랐다.

(6) 홍보활동

○ 「농촌청년」지를 「농민회 소식」지로 대치 발행하고(1975년부터), 「농지임차 관계실태조사 보고서」(1974), 「농협과 조합원」(1975), 「쌀

생산비조사 연구보고서」(1975년부터), 기타 학습자료 및 홍보자료를 발행했다. 추곡 수매가에 대한 대정부건의문(1976년부터)을 보도하였고, 창립 10주년을 맞아 교회 홍보매체를 통해 농민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 성명서 등의 발표가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 70억 비료도입 부정과 농민 피해보상에 대한 성명(1977), 함평 고구마사건, 춘천 농민회 사건, 안동 농민회사건, 아카데미사건(1979) 등에 대한 홍보 및 성명과 농협, 농산물 가격, 농업세제, 외국 농축산물 도입관계에 대한 홍보자료와 회지의 발간이 있었다.

(7) 조직활동

1974년 전남 연합회, 1976년 전북·강원·충남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1975년 한국 천주교 주교단 춘계총회에서 농민회 육성을 각 교구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9월 전국 지도신부단이 결성되었다. 1976년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춘계총회에서 농민회를 교회 공식단체로 인준했으며, 그해부터 안동·청주·마산교구에서 교구사무 예산에 농민회 교육비 및 활동비 지원을 반영했다.

(8) 집회활동

1975년의 쌀생산비조사 보고대회, 1976년의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농민대회를 통해 농민의 정치·경제·문화적 요구를 밝히고 농민의 전국적 일치를 도모했다.

전국 쌀 생산자 대회 및 추수 감사제를 1975년 이후 매년 개최하였다.

4.2.3.3. 성숙기

이 시기는 지난 활동상황을 반성하고 농민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활동방향을 모색하여 실천했던 시기(1980~85)와 민족·민주변혁을 도모했던 시기(1985~87)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농민회 안에서 일기 시작한 농민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분위기는 1980년 5·17을 겪으면서 심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활동 내용

의 부족함을 솔직히 자인하면서, 이데올로기가 아닌 삶의 문제, 생명 문제를 중시하게 되었다.

1980~84년은 활동목표를 “농민의 존엄성 회복, 농촌사회의 민주화, 농산물 가격보장”에 두었고 1985~87년에는 “농촌사회 민주화와 공동체적 삶의 실천”에 두고 반농민적 정책과 제도의 철폐, 생활공동체 기반 구축, 지역운동 확대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1) 협동활동

○ 생산협동(56개 지역), 신용협동(82개 지역), 구관협동(53개 지역), 이용협동(23개 지역), 공동작업 등에 힘쓰고, 생활권 중심(시장권·면·군·본당 단위)의 지역협의회 결성이 활발했다(특히, 1983년부터). 또한 분회를 통한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을 강화하면서, 도시 소비자와의 공동체적 만남을 시도했다(1983년부터). 무공해농업(효소농업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약 30개 지역에서 실천하였다.

○ 공동모내기(20개 지역), 공동구매(21개 지역), 공동작업, 공동판매, 농기계 공동이용, 영농회 운영 등에 힘쓰고, 원주 연합회 회원들은 원주시내 무점포 소비조합과 계약을 맺어 무공해 채소를 직거래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14개 지역을 중심으로 효소농법 등 유기농업운동이 정착되어 갔고, 주민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수지침이 적극 활용되는 등 자연치료법을 보급시켰다.

(2) 문화활동

○ 풍물패 조직, 양서 보급, 민속문화 행사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각종 교육과 행사도 내용과 형식을 문화운동차원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 대동제, 야유회, 옷놀이, 농악놀이 등의 농민생산자 문화를 부활시켜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시키면서 함께 일하면서 어울리는 부락공동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문화활동이 전개되었다.

(3) 민주화활동

○ 농민 관계 조합 민주화활동: 1962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합장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조합운영의 민주적 기능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1982년부터 연합회별로 조합을 선정하여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고, 특히 1983년에는 “조합장 직선제 실시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 교회 및 유관단체, 도시민 등 수십만여 명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전남 구례에서 부당한 농지개량조합비(물세) 시정 서명운동을 벌여 지역농민 600여 명이 동참했다(1982).

○ 농조 해체 및 수세 거부운동: 1987년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한 농민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세 거부 및 농조 해체운동을 벌렸다.

(4) 교육활동

○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농민 스스로 그리고 함께 깨어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보완되었다. 교육활동은 여전히 활발했으며, 특히 부녀교육이 두드러졌다. 두 차례의 큰 사건 발생(미국 문화원 방화사건과 “조합직선제 실시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변동이 없었으며, 특히 농촌 부녀자들의 입회 및 조직 비대화가 두드러졌고, 지역 협의회가 활성화되었다.

○ 농민신문을 발행하고 농민과 대중의 교육을 위한 시청각 매체 및 홍보물을 제작·보급하였으며, 현장단위에서 선전활동(유인물, 현수막, 벽보, 구호)이 활발했다.

(5) 조사연구활동

농림관계법령 연구위원회를 구성(1980)하여 운영하였으며, 문제지역의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실태조사(1980), 농민 조세공과금 실태조사(1981), 농약오염 실태조사(1983), 주민건강 실태조사(1983) 등을 실시했다. 또한 침체된 농촌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449개 공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2,167명의 신자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6) 권익활동

○ 강제행정 거부, 농민관계 조합의 횡포 및 부조리 시정, 부당농지세 부과 시정, 추곡 수매량 확대 요구 서명 및 농협 부채 현물상환, 수세 현물 자진납부 등의 활동이 있었다.

○ 생산비 보장활동: 쌀 및 밭 작물 생산비 조사, 수매가 예시 및 가격보장 요구, 외국 쌀 도입과동을 계기로 외국 농축산물의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

○ 부당한 농지세제 시정활동: 농지세제에 대한 학습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농지세 시정을 정부·국회에 요구하였다. 특히, 1982년 충북 음성에서의 부당 을류농지세 시정을 위한 서명(2천여 농민이 서명) 및 농민집회(1,500여명 참가)를 위시하여 50여 지역에서 농지세 시정활동이 있었다.

○ 소작제(이른바 농지임대차) 양성화 입법 추진 저지활동: 기독교 농민회·가톨릭농촌여성회와 연대하여 교육·홍보 등을 통한 여론화, 대정부 건의성명, 지역 국회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공청회 요구,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입법화 추진을 보류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렸다(1982년).

○ 우편물 검열 및 개봉문제 시정, 정부대여곡 부당수수료 환불, 불량고추 종자보급 피해보상, 텔레비전 시청료 거부(1985), 잎담배 수납 거부와 천마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 외국 소 및 쇠고기 수입 반대와 소값 피해보상운동: 소값 피해 실태조사, 다양한 선전활동과 더불어 고성 소몰이 시위를 시발로 전국 22개 지역에서 전개되었다(4,700여명 동원, 연행자 419명, 부상자 29명). 이 소몰이 시위는 경운기와 소를 동원한 시위로서 소 반납과 소 도살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일반농민들의 참여가 많았던 운동이었다.

○ 농가부채 해결운동: 1986년 봄철에 전남 강진농협에서 소 오물

투척시위로 시작된 소값 피해보상운동이 농가부채 해결운동으로 번져 전국 23개 지역에서 농가부채 탕감 농민대회 및 시위로 벌어졌다. 1987년에 들어 농가부채 해결은 다음 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쟁점의 하나가 될 정도로 부각되었다.

○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운동: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운동은 외국 소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소값 피해보상운동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1985년은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에 따른 피해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실태조사를 18개 군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보고대회, 정책간담회, 피해보상 청구활동을 하였다. 1986년에는 한미통상협상의 타결에 의해 양담배가 수입되자 전국 본부와 각 연합회(10개)는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활동을 위한 전국 본부 및 지부 결성을 하고 30여개 시군에서 수입 저지 실천대회를 가졌다.

○ 농협 민주화와 생산비 보장운동: 민주농협과 쌀 생산비 쟁취를 위한 전남 농민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농민대회가 전개되었다.

(7) 홍보활동

홍보활동을 강화하면서 만화·녹음테이프 등의 제작이 시도되었다.

(8) 집 회

○ 1980년에는 추수감사제 및 농민대회 개최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1981년에는 12개 지역에서, 1982년에는 7개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1983년에는 5·17 이후 처음으로 전국 농민대회를 가졌다(대전에서 2,100여 명 참가).

○ 1985년에는 전국 19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농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농가부채 탕감 등을 주장하였다(1985).

○ 1986년에는 한국가톨릭농민회 운동을 반성, 정리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년사 정리, 교육관 증축사업, 현장·강령·회원 수칙 등 상징적 신념체계의 정리와 농민교과서 편찬사업을 전개하였다. 명동성당에서는 5,000여명의 농민, 유관인사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남북 농민간 농산물, 농기계, 농사기술, 종자 등의 교환을 제안하였다.

(9) 한국가톨릭농민회관 건립

회원들의 정성과 가톨릭 농민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의 인사들의 협력으로 농민회관을 건립(대전시 동구 성남동 1-170, 240평), 1981년 12월 4일 개관식을 가졌다. 창립 15년만에 농민의 집을 갖게 된 것이다. 또 연합회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1981년 11월 안동 농민회관을 건립했다.

4.2.3.4. 새로운 출발

지금까지 농민단체들마다 별개로 벌여 온 농민활동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가톨릭농민회도 농민운동 통일에 적극 지원·노력키로 하면서 향후 진로와 새로운 모습의 정립을 위한 논의와 준비를 하여 왔다. 따라서 1988년 이후의 활동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농민운동에 참여한 시기(1988~89)와 생명공동체운동의 전개시기(1990~)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88~89년의 활동목표를 “농민운동 통일사업에 적극 지원한다.”에 두고 조직 개편과 새운동 준비를 하였다.

1990년 이후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사회운동과 농민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이 큰 변화를 맞게 됨에 따라 한국가톨릭농민회도 그 운동노선과 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첫번째 변화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전면화로 농업 자체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케 된 것이다. 두번째 변화는 환경생태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농업의 특수성과 자연생명을 절대시하는 천주교의 정신적 이념이 모아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가톨릭농민회 내부에서는 1980년대 후반의 광범위한 민중운동의 진출과 그로 인한 농민운동 조직의 대중적, 탈종교적 통합(전국농민회 총연맹 결성)에 따른 위상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전지구적 환경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지구적(global)인 변화는 조직 상층부로 하여금 기존 운동노선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새롭고 근본적인 운동노선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논의는 당시 천주교회 내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부합됨으로써 이에 대한 개인의 각성을 우선하는 생활중심의 대안운동, 전통적 가치와 영성, 공동체와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이른바 생명공동체운동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1990년 이후는 활동목표를 “이념, 추진체계, 조직 운영, 실천방법 등 생명공동체운동의 조직적 실천토대 구축 및 실천사례 축적”과 “생명농업의 종합대안 창출 및 조직의 재정비(1993~)”에 두고, 활동방침도 현장중심 조직활동의 전개, 끊임없는 교육, 성찰, 조사연구 및 이의 생활화·조직화, 한국형 농업발전모형의 모색·실천(생명산업, 종합산업,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위상 정립과 실천)에 두게 되었다.

한편 새운동 전환에 따라 1990년에는 전국 본부의 임원진과 실행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고, 10개 연합회가 모두 교구농민회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본당단위에서는 본당농민회가 결성되거나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국과 지방의 주요 임원과 실무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조직역량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실행위원회 중심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에 6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구 및 본당단위에서도 실행위원회의 구성을 도모하면서 실행위원회별로 활동을 하였다.

1988년 이후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권익활동

○ 수입개방 저지운동: 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를 위한 농민대회가 생산자 조직과 연대하여 서울(건국대, 여의도)과 지방(충남 청양외 9개 지역)에서 열렸다.

○ 수세 거부운동: 1987년에 이어 전남 함평지역에서 시작되어 17개 군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수세 거부운동의 열기는 학계, 국회의원, 농민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수세공청회를 열게 되었고,

전국 수세폐지 대책위원회의 결성을 가져왔다.

○ 농촌의료보험 개혁운동: 농민들은 자신의 생활수준에 비하여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료보험료의 납부를 거부하였다. 전남 무안에서 시작된 농촌의료보험 개혁운동은 13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전문가와 연대하여 국회청원을 중심으로 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및 법안 확정을 위한 결의대회로 이어졌다. 1989년에는 통합의료보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토지 지키기운동: 1987년에 이어 토지 지키기운동은 더욱 확산되었다. 토지개혁에서 누락된 토지나 간척지의 토지소유권 획득뿐만 아니라 군사기지 이전으로 인한 토지수용, 수몰지 등의 토지를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분쟁지역도 고창 삼양사와 서산 금은농장에 이어 영암, 평택, 해남, 신안지역 등 12개 지역이나 되었다.

○ 농산물 제값받기운동: 쌀 생산비 조사를 제농민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정부당국에 2등급 가마당 107,778원에 수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북 영양지역에서 시작된 고추 제값받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9개 지역에서 60여회에 걸쳐 연인원 5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제값받기운동은 1989년에도 2만여 명의 농민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수세 폐지 및 고추 전량수매 쟁취 전국농민대회 개최로 이어졌다.

(2) 조직활동

○ 농민운동 통일과 조직 개편 및 새운동 준비사업: 1988년에 농민운동의 대중화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농민단체간의 연대사업과 통일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기 위해 농민운동 통일을 위한 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월에는 농민운동 통일을 위한 조직개편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조직 개편안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조직 전환과 군 농민회 강화를 위해 각급 단위 실무자와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3) 실행위원회 활동

○ 생활공동체위원회: 1990년에는 1회의 모임을 가지고 마을 생활 협동반과 소비자공동체 운영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실질적인 운영실적은 없었다. 1991년에는 1·2차에 걸쳐 생활협동반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충북 음성 성미공동체를 비롯하여 경남 고성, 전남 보성 웅치, 충북 괴산 청천, 충북 음성 봉암 등지에서 생활공동체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몇 가구가 유기농업으로 공동 경작하는 등의 기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2년에 이르러 생산자 협동체 조직을 통한 생산, 가공, 유통의 일원화를 시도하였다. 안동교구의 쌍호, 솔퇴, 퇴강, 광주교구의 진도 등지에서는 유기농산물의 협동생산, 협동유통을 실천하고 있으며, 구례, 무안의 밀 제분과 함께 태인, 안계 등지에서는 지역 특산품의 가공,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산, 유통조직이 자금 확보면에서 튼튼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유기농업위원회: 유기농업의 실천은 새운동실천의 중심과제로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990년에는 전국 위원회 및 교구농민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유기농업에 대한 조직적 지원·협력활동은 매우 미약하였다. 다만 전국유기농업연수(11월 40명)를 통해 현장의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과 조직적 지도·협력의 필요성을 교육시켰다. 1991년에는 충북 음성 성미공동체에서 유기농업연수를 실시했고, 유기농업에 관한 자료집의 제작에 착수했다. 유기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나 판로의 불확실, 병충해에 대한 대처기술의 미흡으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2년에는 유기농업에 대한 조직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유기농산물 유통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유기농 운동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에 노력하였다. 1993년에는 유기농업의 주생산물인 쌀과 채소의 판매는 주로 교구 직매장이나 생협, 교회를 통해 하고 있으나 쌀을 제외하고는 생산 축소

와 소비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유통사업위원회: 1990년의 각 교구별 유통사업위원회는 준비 또는 추진단계에 있다. 다만 기존 유통사업단체인 서울지역의 한살림을 비롯한 원주, 마산, 진해, 울산, 대전, 청주, 전주 등지에서 소협과 한국가톨릭농민회 지역조직과의 결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1991년에는 중부지역(충남북, 경기, 춘천)은 서울교구를 상대로 크고 작은 사업을 벌여 나갔으며, 1993년에는 대전, 청주, 광주, 안동(대구)에서 교구 직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원주, 전주, 수원 등은 그간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직매장, 전문사업단 구성을 준비하게 되었다.

○ 농민사목위원회: 1990년에는 전국 위원회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주교구에서는 사제, 평신도, 회원이 함께 참여한 농민사목위원회를 구성, 모임을 가지고 새운동추진계획 수립, 본당별 생활협동반 조직화 등을 추진하였다. 1991년에도 전국단위의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주교구 농민회의 농민사목위원회활동만 있었다. 1992년에는 전국지도 신부단에서 농민신학 연구팀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연구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전국 각계의 7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갖고 새운동의 신학적 토대를 세우는데 기여하였다.

○ 생활건강위원회: 1990년에는 1회 모임과 2차례의 전국 수련회를 통하여 건강운동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 1991년에는 생활건강 수련회를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으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였고 안동에서는 교구단위 건강 수련회를 가졌다. 1992년에는 2차에 걸친 수련회에 70여명이 참석하여 생활건강부문의 전문성을 높여가게 되었다.

○ 여성활동위원회: 1990년과 1991년에는 여성활동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각 2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없었다.

1992년에는 그 동안 침체해 있던 여성활동위원회의 분회가 재조직되는 등 밑에서부터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여성실무자의 활동력 강화가 요구되어 각 교구농민회나 본당 농민회 간사를 실행위에 참여시켜 여성실무자 교육을 1차례 실시했다. 그러나 여성실무자들의 계속되는 공백과 활동여건의 약화로 하반기에는 후속작업이 뒤따르지 못했다.

5. 한계점과 과제

한국가톨릭농민회는 1960년대 이후 사회 변혁을 위한 대중적 조직운동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농민의 자주적이고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면서 농업 및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국단위의 대중운동조직으로 존재하면서 나름대로의 사회 변혁에 기여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대중조직체로서의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난 30여년간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수행한 운동의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운동의 조직단위로서 마을을 중시하고 주민의 일상적 삶과 운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역량을 육성하면서 대중주체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둘째, 쌀 생산비조사, 농협 실태조사, 농지세조사 등의 조사연구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근거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운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각하였다.

셋째, 역사적인 변혁시기에 농촌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선도적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른 농민운동단체와의 연대운동에 비교적 열린자세이었다.

- 유신때의 안동농성운동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대
- 5공 초기 때의 삼엄한 상황 아래서의 최초의 대중집회인 음성

을류농지세 시정운동 및 수십만의 농민대중을 참여시킨 농협조합장 직선제 서명운동

- 반외세 자주화운동으로서 농민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된 전국 20여 곳에서 벌었던 소몰이 시위운동 및 양담배 시판일을 기점으로 한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를 위한 전국 32곳에서의 동시다발적 운동 전개

넷째, 현장교회활동을 통해 농민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천주교회가 농민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교회로의 내부적 쇄신을 하도록 하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한국가톨릭농민회는 농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였다.

첫째, 천주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지도를 받으면서 조직이 종교적 형식에 억매이고 또 교회와의 마찰을 일으키므로써 운동을 일반대중화하는데 제약을 받았다.

둘째, 1980년대에 들어 운동 방향과 내용이 경제적·정치적 투쟁으로 이데오르기화함으로써 현장활동으로서 강조되어 온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운동이 약화되면서 수단화·형식화되어 갔다.

- 민주화운동으로서 민주헌법 쟁취 및 군정 종식을 위한 야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운동

- 민족통일운동으로의 남북 종자 교류 및 남북 농민 교류활동 주장

셋째, 이처럼 운동의 방향이 변질됨으로서 생활공동체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심 일꾼의 양성과 이를 위한 물질 토대의 구축기반이 미약해짐으로써 운동을 주동할 역량 확보가 미흡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가톨릭농민회가 농민운동의 통일사업에 의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결성을 계기로 1990년부터 운동 방향을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전환하면서 농민운동의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가톨릭농민회가 이러한 농민운동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농업생산 및 소비형태의 유기적 순환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 구체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를 도모키 위한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면서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모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자기 변혁을 위해 일신해야 한다.

둘째, 당면한 농업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의 한국적 모형을 정립하고 지역단위의 다양한 생산자공동체의 건설과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하는 농업의 운영체계를 통해 도시 소비자와 농산물 직거래 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밀 살리기운동과 같은 범국민적, 자국적인 농업회생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 공동체의 조직 전환 및 확대를 통해 농민운동을 삶과 일치하는 현장 중심의 운동형태로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대안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동형태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을 추구해야 한다.

넷째, 이상의 당면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헌신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또 다양한 생산자 공동체 건설을 위한 방안의 마련과 교회의 전폭적 참여를 이끌 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직 자체의 혁신을 기울여야 한다.

제 3 장

한국기독교농민회

1. 설립 배경

한국기독교농민회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전남지역의 농촌교회 평신도 농민과 청년 일부가 지역단위 농민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태동하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농민운동을 배출하는 유일한 농민교육기관인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농민교육을 통해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을 갖추고 농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농민운동만이 당면한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국가톨릭농민회를 통해 농민운동에 참여하거나 농촌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농민 소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농촌분과위원회와 연관을 가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활동하는 교회의 농촌청년들이 합류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당시의 농민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운동의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와 같은 농민운동가들 내부에서의

농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와 함께 농업·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회운동의 민중지향성이 강화되면서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조직화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전남의 무안, 해남, 강진, 보성군 등에서 농민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농촌교회 평신도와 청년활동가들이 모여 기독교농민회의 조직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활동을 시작하면서 조직적 태동을 하게 되었다.

전남지역의 기독교농민회 활동가들은 당시의 진보적인 교회운동가와 연대 및 지지를 돈독히 하기 위해 1977년 12월 서울 선교교육원에서 민중신학자, 기독교수, 기독교 인권운동가, 기독교청년, 농촌목회자 등과 함께 기독교농민회 조직화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교회운동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지와 지원의 기반을 넓혀 나갔다. 이런 가운데 1978년 초 전남 기독교 농촌청년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전남지역에서부터 본격적인 조직화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원을 청년층으로 국한하지 말고 전 계층의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농민조직을 만들자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78년 3월에 전남 기독교농민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설립 배경을 거쳐 탄생된 전남 기독교농민회가 오늘날 한국기독교농민회의 모체가 되었다.

2. 조직 목적과 활동 방향

전남 기독교농민회는 1978년 3월 창립대회를 통해 그 목적을 “그리스도 복음의 빛 아래서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전통을 이어받은 주체적 농민문화를 창조하여 민주화와 협동화를 통한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직 목적은 1982년 3월에 결성된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

회」와 1989년 2월에 개칭된 「한국기독교농민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 목적을 가진 한국기독교농민회는 그 조직의 성격을 하느님의 선교원칙에 따라 농촌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역사발전의 진보적 입장에 서서 역사의 주체자이고 생산자인 농민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회복하며, 농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확립하는 농민운동을 전개하는 농민운동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활동 방향으로, ① 농촌의 민주화와 협동화를 통한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발전 도모, ② 농민의 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을 통한 농민 권익 실현, ③ 민족전통을 이어받은 주체적 농민문화 창조와 생산적이고 자주적인 농민공동체 형성, ④ 국내외 기독교 연합운동에의 참여를 통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 실현, ⑤ 양심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제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민족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농민선언을 통해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농민들은 오늘날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생존권적 기본권마저 무시된 채 경제적 빈곤, 사회적 천시 및 정치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당면한 농민현실을 진단하고 그 근본원인은 전근대적 생산관계의 불완전한 청산과 잘못된 식민지적 경제구조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기독교농민회 회원들은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결성을 계기로 더욱 더 강력한 농민 대단결을 견지하여 농민 권익실현과 농민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개 행동강령을 선언하였다.

- ① 토지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의 생활 향상 및 지위 향상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토지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 도시 자본의 농지 보유를 금하며, 일체의 소작을 금지하라.
- ②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도입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농산물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보장하라.

- ③ 농협, 농지개량조합, 수협, 축산조합 등 모든 농업단체를 민주화하고, 부당한 농지개량조합비 부과를 시정하라.
- ④ 주택개량 강요, 신품종 경작 강제 등 일체의 강제농정을 즉시 중지하고, 농민의 자유 영농권을 보장하라.
- ⑤ 농지세 과세금액을 순이익에 근거하고 도시 근로자 소득면세점과 같이 면세점과 누진율을 현실화하며, 계산방법을 현물이든 현금이든 일원화하라.
- ⑥ 2조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를 전액 면제하라.
- ⑦ 비료공장 난립에서 오는 손해를 농민만이 부담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주장하며, 비료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 ⑧ 유해한 농약 생산을 중단하고 농약, 농기구 등 농업용 자재의 폭리를 시정하라.

이와 같은 활동지침에 따라 농민운동을 전개해 온 한국기독교농민회는 1988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농민운동의 통일을 계기로 1989년부터는 활동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의운동·생명운동·공동체운동을 펼치는 평신도 농민선교단체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3. 조직화과정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조직화 과정을 보면 (그림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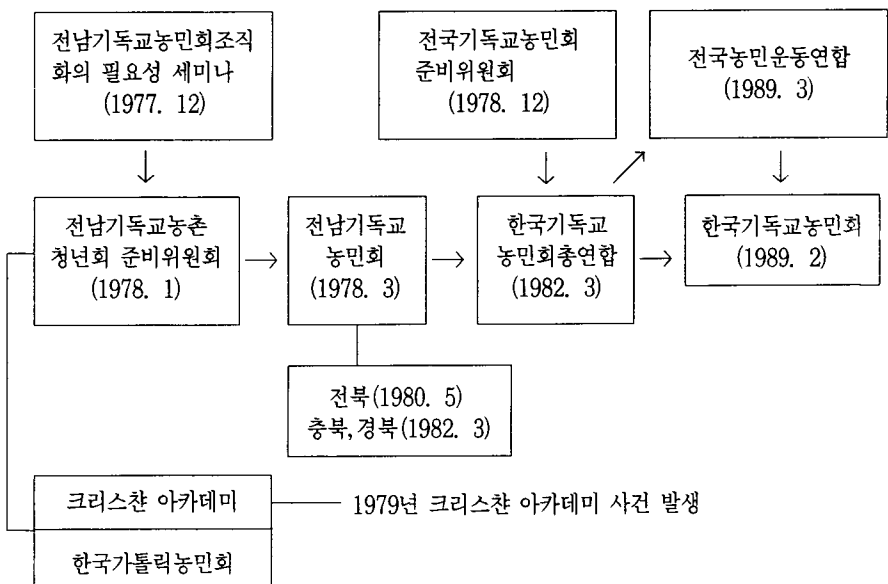
한국기독교농민회는 1978년 3월 해남군의 신월교회에서 무안, 해남, 강진, 보성, 영암군 등에서 모인 50여명의 농민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농민교육점 창립대회를 거쳐 출범한 전남 기독교농민회를 그 모태로 한다. 전남 기독교농민회는 지역단위 농민운동에 전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단위의 기독교농민회 조직화를 위한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 여름에 전국에서 10여명의 활동가들이 전북 송광사에서 교육겸 전국단위 기독교농민회 준비를 위해 모였다. 그 해 12월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지의 농민 활동가들이 전주에서 모임을 갖고 전국기독교농민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단위의 기독교농민회 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준비위원회는 정례적으로 공식회합을 갖고 각 지역단위의 조직활동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농민운동 지도자로서 부족함 없는 자질을 닦아 나갔다. 한편 전국기독교농민회 준비위원회는 농민활동가를 발굴·확보하면서 각 마을 현장과 농촌교회를 조직화하며, 현장의 농민회 조직기반을 확보해 가기 시작하였다.

전국 준비위원회는 창립 1년만인 1979년 12월에 도시산업선교회관에서 1982년 봄까지 전국조직을 공식 결성기로 결의하고, 각 도단위 조직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그림 3-1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조직화과정



그 결과 전남에 이어 1980년 5월에는 전북 기독교농민회가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 5·18 광주항쟁으로 조직활동이 대폭 위축되고 침체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가을부터 조직을 정비하고 일상활동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더 치밀한 조직활동을 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1981년 3월에는 경북 준비위원회와 충북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1982년 3월에는 충북 기독교농민회와 경북 기독교농민회가 공식 창립되었다. 이러한 조직활동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1982년 3월 18일 대의원 26명과 실무자, 내외인사 등 50여명이 산업선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3월에는 경북 기독교농민회가 창립되었고, 이어 1983년 3월에는 충남 기독교농민회가 창립되었다.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는 1989년 3월에 대중적 농민운동의 단일한 조직 건설을 위한 과도적 연합체로 전국 농민운동단체 연합이 결성됨에 따라 본부(총연합회)와 도·군단위에서도 전국 농민운동 연합에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조직통일 사업을 전개기로 하였다. 이에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은 1989년 2월 28일에 한국기독교농민회로 개칭하여 정의·생명·공동체운동을 향한 농민선교단체로서의 제2의 출발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운영체제와 주요 활동

4.1. 운영체제

한국기독교농민회는 1990년을 전후하여 조직 및 운영체제가 약간 바뀌었다. 이는 1988년에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기존의 농민운동단체가 각기 수행해 온 정치적 운동이 흡수·통합됨에 따른 역할 재정립에

기인되었다.

1990년 이전까지의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조직 및 운영체계는 (그림 3-2)와 같다.

조직 구성은, ① 면(부락) 지회, ② 군 농민회, ③ 도 농민회, ④ 총연합회의 4단계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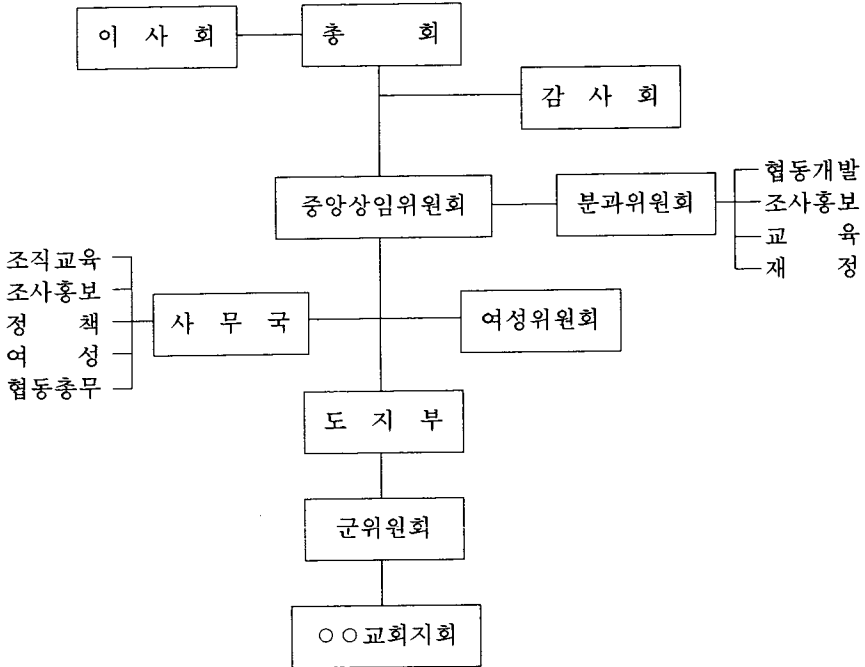
지회는 5명 이상의 회원이면 지회 설립이 가능하며, 부락 또는 면단위 지역에 둔다. 군 농민회는 2개 면에 걸쳐 5개 이상의 지회가 있거나 개인회원 수 20명 이상이면 군 농민회의 설립이 가능하다. 도 농민회는 3개 군 이상의 농민회가 구성되면 도 농민회가 구성된다. 총연합회는 최고 의결집행기구로서 군 및 도 기독교농민회에서 파송하는 농민회장급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조직체계는 1990년에 이르러서도 농민회가 위원회로 지회의 단위가 부락에서 교회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다.

운영체계로는, ① 총회, ② 중앙상임위원회, ③ 이사회, ④ 감사회가 있다.

총회는 군 및 도 기독교농민회에서 파송하는 지회장급 이상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기능은, ① 사업의 과제 및 방향 정립, ②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③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승인, ④ 임원 선출 및 해임, ⑤ 감사 선출, ⑥ 회칙 개정, ⑦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 임원, 도 및 군 기독교 농민회장과 총무로 구성되며,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① 총회가 의결하여 위임한 사항 처리, ② 사업계획서 작성, ③ 회원의 가입 및 제명 결의, ④ 공식 임원 및 감사 보선, ⑤ 본회 운영을 위한 제규정 및 세칙 제정 ⑥ 유관단체회의 참가자 및 대표자 선정, ⑦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의결, ⑧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을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회는 본회 사업계정 및 업무전반에 걸쳐 연 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그림 3-2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조직 운영체계(1971~89년)



이러한 운영체계는 1990년 이후에는 중앙상임위원회에 협동개발, 조사홍보, 교육, 재정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에는 조직교육, 조사홍보, 정책, 여성, 협동총무를 두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운영체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4.2. 주요 활동 상황

4.2.1. 활동분야

한국기독교농민회는 그 조직목적에서 지향했던 활동 내용의 성취를 통하여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농민의 권익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한국기독교농민회가 수행해 온

활동은 대략 7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4.2.1.1. 교육사업활동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태동한 기독교농민회가 전국 각지의 농민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기 위하여 교육사업에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사업은 1차교육(농민교육), 2차교육(회원교육), 3차교육(간부교육)으로 체계화하여 전개하였다. 교육 내용은 우선 농민들의 농업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의식화하기 위하여 농업·농민문제를 중심으로 그 발생원인과 해결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독교농민회란 점을 감안하여 성서연구도 병행하였다. 이외에도 유기농업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교육도 하였으며 군, 도단위 농민회에서 농업·농민문제를 주제로 한 초청강연도 하였다.

4.2.1.2. 홍보·출판활동

교육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출판사업과 홍보활동이 있었다. 주요 내용은 기독교농민에게 필요한 소식이나 농업정책 내용을 알려주는 월간기농, 농민세상 등의 회지의 발행을 비롯하여 현장활동에 필요한 <농가부채실상> <농지세란?>과 같은 각종 정책자료를 발행·공급하였다.

4.2.1.3. 조사·연구활동

현장의 각종 농민문제, 수입현황, 여성농민 건강상태, 농촌탁아문제 등을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활용한다.

4.2.1.4. 권익 실천운동

잘못된 농업정책,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 농축산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 회원들의 힘을 모아 해결한다.

4.2.1.5. 문화활동

퇴폐적인 소비문화와 서구적인 향락문화를 거부하고, 한민족 전통의 건강한 생산문화를 보급하고 확산한다.

4.2.1.6. 생산활동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자제하고, 퇴비와 천적을 이용한 유기농사를 보급·실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

4.2.1.7. 연대활동

기독교 사회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제 민주단체와 연대하여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참 하느님 나라 건설에 함께 한다.

4.2.2. 성장단계별 시기 구분

한국기독교농민회가 1978년 전남 기독교농민회를 모태로 하여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조직의 성장단계를 네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이기는 하나 지난 15년간에 걸쳐서 한국기독교농민회가 급격한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변신을 도모하여 왔기 때문에 이 조직의 활동 변화와 성격 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4.2.2.1. 태동기(1978~81)

전남 기독교농민회로부터 출발하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농민의 권익 실천운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전국적 조직의 기반을 마련했던 시기다.

4.2.2.2. 정착기(1982~83)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라는 전국적 단위조직을 결성하여 조직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전국적으로 농민의 권익 실천운동을 전개한 시기다.

4.2.2.3. 성숙기(1984~88)

농민 스스로의 판단을 통한 농민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농촌현장과 농민 대중속으로 조직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농민운동의 전면화와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던 시기다.

4.2.2.4. 평신도 농민선교단체로서 새로운 출발(1989~)

농민운동단체의 통일화에 따라 정의, 생명, 공동체운동으로 활동 방향을 재정립하는 등 농민선교단체로서 새롭게 출발한 시기다.

4.2.3. 성장단계별 주요 활동 내용

한국기독교농민회가 성장단계별로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살펴 보기에 앞서서 태동기에서 평신도 농민선교단체로 새출발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각 성장단계별 활동목표 및 방향과 주요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태동기에는 활동목표를 조직 확대와 농민운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두고 이를 위한 회원 및 간부에게 조직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농협 강제출자 거부와 농지세, 수세 시정 등의 권익 실천 활동을 하였다. 정착기에는 활동목표를 조직역량 확보와 농촌현장에 기초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두고, 농민, 회원, 간부에 대한 교육활동과 더불어 염전 피해보상, 농협의 민주화와 조합장 직선제 요구 등의 권익 실천활동을 벌렸다. 성숙기에는 활동목표를 농민의 정치역량 확보 강화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농민의 사회문화적 인간회복에 두고 이를 위해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의식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경지정리 부정 시정, 을류농지세 시정, 수세 폐지, 농가부채 탕감 등을 요구하는 권익활동과 농축산물 수입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활동을 하였다. 농민선교단체로의 새로운 출발기에는 조직체의 이념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동목표를 정의로운 토지제도 및 가격제도의 실현과 자주적이고

표 3-1 한국기독교농민회의 성장단계별 주요 활동 목표와 활동 내용

성장단계별	활 동 목 표	주 요 활 동
태 동 기	○ 군단위 조직 확대 ○ 회원 확보 위한 교육	○ 교육문화활동: 집체교육, 특강, 각종 학습회, 연구회 운영 ○ 권익실천운동: 농협 강제출자 거부, 농지세, 수세, 경지정리 부실공사 시정 등 ○ 자료발간: 농민선교집, 지회운영지침, 각종 농업문제 자료집 발간
성 장 기	○ 조직역량 확보 ○ 현장에 기초한 운동 전개 ○ 교계 및 유관단체와의 유대 강화 ○ 재정자립 확대	○ 교육문화활동: 농민, 회원, 간부, 목회자 교육, 추수감사제 ○ 권익실천활동: 염전 피해보상, 농협운영의 민주화와 조합장 직선제 요구 등 ○ 자료발간: 농협의 운영과 역사, 농지세실태 등의 자료와 회지 발간 ○ 조사활동: 농가부채 특별대책위원회구성과 현지조사
성 숙 기	○ 농민의 정치역량확보 강화 ○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	○ 교육문화활동: 농민회원, 간부, 강사개발교육 실시 ○ 자료발간: 농협, 농지세 등에 관한 자료집과 회지, 홍보물 발간 ○ 권익실천활동: 경지정리부정 시정, 을류농지세 시정, TV시청료거부, 수세폐지, 농민관계조합의 민주화 운영요구, 농가부채탕감, 간척지 농민 불하 ○ 집회활동: 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소값 피해보상 요구 시위
새로운 출 발	○ 농민의 사회문화적 인간회복 ○ 정의로운 토지, 가격제도 실현 ○ 민주적인 농업, 농민단체 실현 ○ 생태계 파괴 극복 ○ 생활공동체 실현 추구	○ 교육홍보활동: 회원의 훈련을 위한 교회 및 도단위 교육, 전현직 간부수련회, 농촌목회자 세미나 개최 ○ 자료발간: 기능안내책자, 소식지 발간 ○ 조사활동: 평신도 의식조사, 면단위 농촌실정 및 의료보험 실태조사 ○ 권익실천활동: 미국식품반대시위, 수입개방저지 농민운동, 평택·서산군 등의 토지운동 농민 지원

민주적인 농업·농민단체의 실현 등에 두고, 이를 위해 교회단위 조직기반의 조성 및 평신도 농민에 대한 교육·훈련사업과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고 더불어 외국 농산물 수입저지 농민대회와 평택, 서산 등지에서 벌인 농민의 토지운동을 지원하고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운동을 벌였다.

4.2.3.1. 태동기

주로 전남 기독교농민회와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농민운동가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통해 마을과 군단위 조직활동에 주력하면서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농민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권익 실천운동을 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

농민회원에게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의식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집체교육과 마을단위의 기초교육에 치중하며, 기독교농민회 소개, 농민문제의 현실과 본질, 마을단위에서의 활동방법과 사례 등을 교육하였다.

(2) 권익 실천활동

농협 강제출자 거부 등 각종 농협의 반농민성을 시정하기 위한 농협 민주화운동, 을류농지세 시정, 수세 시정, 경지정리 부실공사 시정, 노풍벼 피해보상운동 등을 벌였다. 이외에 지역단위 농민연대운동으로 함평 고구마사건, 광산 삼도단지 경지정리사건, 벌교 토지운동 등의 농민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3) 자료 발간

농민선교 자료집, 수세 자료집, 농협의 운영과 역사, 농지세 해설, 지회 운영 지침서 등을 발간하였다.

(4) 조사활동

마늘, 양파, 고추, 보리 등에 대한 조사, 신품종 벼 강제경작 및 피해에 관한 조사, 농민생활 의식조사, 농촌 평신도 의식조사 등을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였다.

(5) 농민문화활동

각 지역별로 학습회를 하고 농민문제, 농민운동, 성서연구, 민중신학 등에 관해 학습활동을 하였다.

4.2.3.2. 정착기

기독교농민회를 현장단위에서 부터 전국단위에 이르기까지 굳건히 세워 나가며, 그 조직활동의 기반을 축적하였다.

1982년은 활동계획을, ① 교육사업과 조직사업, ② 자료 출판사업, ③ 조사사업, ④ 문화행사, ⑤ 현장권의 실천사업에 두고 각급 단위 농민교육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조직의 확대, 강화를 1차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1983년은 활동 방향을, ① 기본조직인 마을과 지역조직 활성화를 통한 조직역량 확보, ② 농촌현장의 현실적 과제에 기초한 운동 전개, ③ 교계 및 유관단체와의 유대 강화와 지지세력 확보, ④ 재정 자립을 위한 특별사업의 추진으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계획에 따른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

각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1차교육(농민교육), 2차교육(회원교육), 3차교육(간부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마을단위교육, 지회교육, 도단위 교육, 농민목회자교육도 하였다. 1982년에는 농민교육(3회), 회원교육(1회), 지역교육(1회) 등을 실시하고, 1983년에는 마을교육(19회), 지역교육(3회), 농민교육(5회), 회원교육(2회), 임원교육 등을 실시했다.

(2) 권익 실천운동

1982년에는 장흥 농민탄압사례 공개사과, 신만리 염전 피해보상, 무안 해제면의 농민회원 신원조사사건, 농협 총대 선거 불법시정운동과 더불어 소작농 양성화 입법 반대운동을 벌였다. 1983년은 추곡 제한수매 시정 및 추가수매 요구운동, 부당 농지세 시정운동, 농협 민주화운동, 각종 마을 민주화운동 및 농협조합장 직선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3) 자료 발간

회지를 비롯하여 “농협의 운영과 역사”, “농지세란?”, “제3세계와 경제적 민족주의”, “쌀수입에 대한 자료”, “기독교 사상자료(1982)”, “회지”, “농민시사물음”, “농가부채자료(1983)” 등을 발간하였다.

(4) 조사활동

농가부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가부채 조사와 YMCA와 공동으로 농가 부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1983).

(5) 농촌문화활동

마을잔치, 야유회, 농민회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남 해남 기독교 농민회는 추수감사제와 농민축제를 1,200여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하였다(1983).

4.2.3.3. 성숙기

이 시기는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이 확대되는 등 개방농정이 가시화 되고 복합영농의 실패로 인해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이농이 속출하는 등 농가경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한데다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민의의 분출이 격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농민회는 농민 스스로의 판단을 통한 농민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농촌현장과 농민속으로 조직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갔다.

이를 위하여 활동목표를 “농민의 정치역량을 확보·강화하고, 농민의 일상적 권익 실현을 통한 생존권의 보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실현하고 농민의 사회적 문화적 인간다움의 회복”에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민운동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농민의 정치역량의 확보·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및 농민관계조합에의 농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농민관계조합의 민주화의 실현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농민회별로 중심인물의 훈련

및 양성을 통한 현장지도력을 강화하고 홍보·선전을 통한 농민대중의 참여의식을 고양시켜 농민운동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방침을 수립하였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농정제도의 개선과 현장단위에서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경제협동을 위한 과제 실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국단위의 농업정책 및 제도 개선운동과 부채 탕감, 부당수세 및 농지세 시정운동을 비롯하여 공동생산, 공동구판매, 공동이용운동 등의 전개를 활동방침으로 하였다.

농민의 사회적·문화적 인간다움의 회복을 위해서는 농민도 당연히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나아가 생산적 농민문화를 창조하여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내부의 공해를 추방하고 마을 및 지역단위에서의 생산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문화과제를 실천하고 나아가 농촌 의료보험 및 농촌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요구 등을 활동방침으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활동목표와 활동방침하에 수행한 주요 활동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

1984년에는 농민교육(3회), 회원교육(2회), 농민강사 개발교육(6회), 간부교육(9회), 지역교육(14회), 마을교육(22회)을 실시하였다.

1985년에는 총연합회에서 농민교육(4회), 회원교육(3회), 강사개발교육(2회), 간부훈련(1회) 등을 실시했다. 각 도 기독교농민회에서도 마을교육(24회), 문화교육(3회), 지역교육(2회), 간부훈련(6회) 등 30여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하 군 농민회에서도 마을교육(14회), 문화교육(9회), 지역교육(1회), 간부교육 등을 하였다.

1986년에는 농민교육(8회), 활동가교육(2회), 간부교육(1회), 강사개발교육(1회), 홍보교육(1회), 여성농민교육(6회)를 실시하였고, 농민운동의 연대성 증진을 위해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여성농민회의 군 총무교육도 실시하였다.

1987년은 교육활동이 점차 체계화되고 현장성이 강화되어 군 농민회가 자გი지역의 마을교육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3회의 마을교육을 비롯하여 군단위 농민교육(22회), 도단위 농민교육(13회)을 실시하였다. 대신 총연합회는 지도자교육(1회)과 활동가교육(2회)만을 실시하였다.

1988년은 도, 군단위 농민교육, 활동가교육, 회원 수련회, 일일교육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2) 자료 발간

1984년에는 농협, 농지세 등에 관한 자료, 회지(3회), 농민시모음(3회), 노래모음집, 이야기 책과 홍보물(농가빔 탕감하라, 기독교농민선언 등)을 발행하였다. 특히, 1984년의 제2차 기독교농민 선언에서는 1982년 1차 선언문과 비교할 때 쌀, 보리의 수매문제, 의료보험 실시문제, 농어촌 중학교 의무교육실시 문제, 대기업 축산경영문제, 농민운동탄압 중단 등이 추가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토지 없는, 토지 적은 농민의 생활 및 지위 향상은 경자유전에 입각한 토지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소작농 양성화를 반대하며, 도시자본의 농지 보유와 일체의 소작을 금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라.
- ② 개방농업정책과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철폐하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도입을 즉각 중단하며, 농산물 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보장하라.
- ③ 쌀·보리 수매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값으로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현금으로 일시에 수매하라.
- ④ 농협·수협·축협의 조합장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농지개량조합의 잠정조치를 즉각 철폐하여 농민의 자주적인 농업단체로 민주화하라.
- ⑤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도시근로자의 인적공제액 수준으로 현

실화하고, 갑류농지세의 과세금액을 순이익에 근거하여 현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고, 계산방법을 일원화할뿐 아니라 농지세율을 인하하고 과표단계를 더욱 세분화하는 등 부당한 농지세제를 시정하라.

- ⑥ 부당한 농지개량조합비(수세) 부과를 시정하고, 현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징수하는 납부제도를 일원화하라.
- ⑦ 3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인해 파탄에 이른 농가경제에 대한 특별대책을 요구하며,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농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하라.
- ⑧ 농약공해에 시달리는 전체 농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라.
- ⑨ 농어촌 중학교 의무교육을 조속히 실시하라.
- ⑩ 외국과 불평등계약으로 설립된 비료공장의 손해를 농민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비료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라.
- ⑪ 유해한 농약 생산을 중단시키고, 농약·농기구 등 농업용 자재의 폭리를 시정하여 적정가격으로 공급하라.
- ⑫ 농가의 축산과동을 조장하여 폭리를 얻는 대기업의 축산경영을 규제하라.
- ⑬ 농민에 대한 부당한 행정강제, 경작강제 등 부당한 농민 권익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 ⑭ 농업문제 해결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985년에는 농민신문(4회)를 비롯하여 성명서, 전단, 회지, 교육자료 등 총 35종의 홍보물을 발행했다.

1986년에는 농민신문(6회)과 정세분석지인 최근의 운동동향(6회)이 총연합회에 의해 발행되었다. 군단위에서도 영동군의 흠소리, 영동농민의 진실을 비롯하여 괴산군의 비탈밭, 괴산농민회를 위시하여 고창, 무안, 담양군에서 신문이 발행되었다.

1987년에 각 도 기독교농민회는 총26종의 선전물을, 각 군 농민회

는 총 129종의 선전물을 제작·배포하였다. 총연합회는 농민신문과 세상이야기를 12회씩 발행하고, 그 외 기관지인 농민세상을 비롯하여 각종 성명서, 담화를 발행했고, 농민운동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농민과 민주주의, 의료보험, 최근의 수입 개방, 농지개량조합과 수세 등을 연구제작, 배포하였다.

1988년에는 농민신문과 세상이야기를 각각 11회와 10회씩 발행하였고, 27종에 달하는 총연합회의 성명, 전단을 발행하였다.

(3) 권익 실천활동

1984년에는 호남·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권익 실천활동을 전개(부여군 경지정리 피해보상운동, 임실군 롯데우유 부정 시정운동, 고창군 비료출고 시정 및 경지정리사업 시정운동, 무안군 벼 수매 배정량 부정대책, 울류농지세 해결운동 등)하였다.

1985년은 군단위 농민운동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군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권익 실천활동을 전개하였다. 강진군에서는 취로사업 공동운영권 쟁취활동, 농활실태조사활동, 부당수세 거부운동을, 무안군에서는 낙서, 유인물 등을 통한 농민문제 선전활동, 양파 수입 반대 서명운동, 농협 민주화운동을, 해남군에서는 수협 부조리 시정운동, 농협 냉장고 판매 시정운동을, 고창군에서는 부당농지세 시정활동을, 임실군에서는 농협 조합장 부당임명 시정운동을, 김제군에서는 농민문제 폭로 및 군사독재정권 규탄 선전활동을, 서천군에서는 장항제련소 공해 피해보상활동을, 영동군에서는 공해산업피해 농가보상활동을 하였다.

1986년에는 상주군에서 규산질비료 강매 반대,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대금 환불운동, 방위협의회비, 향군회비 거부운동을 하였다.

1987년에는 장성군에서 자갈대 징수 거부운동, 적십자 회비대책활동이 있었고, 무안과 담양에서는 마늘, 양파생산비 보장운동이, 화천, 완주, 청원 등지에서는 TV 시청료 거부운동과 무보수부역 거부운동을 벌리었다. 또한 거창, 부여, 서천, 논산, 김제 등지에서는 수해피해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연초부터 수세폐지운동을 주요 실천과제로 삼았고 가을부터는 장성, 해남, 나주, 담양, 강진, 곡성에서 수세 폐지운동이 있었다. 수세 폐지운동은 1989년 초까지 수세 폐지, 농조 해체, 수리청 신설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대중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1988년에는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6월 28일 각 농민단체, 빈민단체, 의료인 단체들이 모여 전국 의료보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연대하여 의료보험개선운동을 벌였다. 양담배 수입개방으로 담배경작 농가들이 고추농사로 몰리어 고추값이 과잉 생산으로 폭락하자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고추값 제값받기운동을 벌렸다.

(4) 집회활동과 외국 농축산물 수입저지 및 소값피해 보상운동

1984년에 함평장터에서 700여명의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함평, 무안지역 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농민대회는 이 지역 주산물인 양파에 부과된 과도한 율류농지세 문제, 생고구마 수매문제, 외국 소 도입으로 인한 소 사육농가 피해문제, 영세농가의 과중한 부채문제, 추곡수매가문제, 농협 민주화문제, 도시자본의 투기로 인한 소작문제,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문제 등 현안의 농민문제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를 주장키 위한 것이었다.

1985년의 농민운동은 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및 소값 피해보상운동(일명 소몰이운동)에 집중되었다. 4월 2일 영등포 산업선교회관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요구 규탄대회와 더불어 미국 대사관 진입시위가 있었다. 이후 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및 소값 피해보상운동은 여름부터 소몰이운동으로 확대되어 총 20여개 군에서 2만여명의 농민이 가담하게 되었다.

충북 기독교농민회의 7월 17일 고 서형석씨 추도식 및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 농민대회와 시위, 임실 기독교농민회의 8월 6일 소값 피해보상요구 시위, 8월 24일 부안지역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쫓기대회 및 10일간의 서울, 전주 농성운동, 전남 기독교농민회의 9·6전남 농민대회, 강진 기독교농민회의 9·9 개방농정철폐 가두시위 등 도·군

단위에서의 현장운동이 지속되었다. 9월 25일에는 농민운동 및 민주당체와의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농축산물 수입 반대와 소값 피해보상운동 진상보고대회가 있었다.

1985년의 소몰이운동은 향후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운동을 농민운동의 중심적 과제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에는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운동이 농민 생존권 쟁취차원으로 발전되고, 이를 위한 운동 추진위원회가 지역단위로 결성되어 대회 및 시위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남군은 4월 6일 소몰이운동을 벌이고 민주농협쟁취운동, 도로변 토지세 시정운동을 벌였다. 충남에서는 7월 28일과 12월 6일 충남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양담배 수입 저지활동을 벌였다. 서천군에서는 마늘 생산비 보장 및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운동이 있었다. 충북에서는 4월 21일 충북지역 농민생존권 쟁취 및 농축산물 수입 반대운동위원회를 결성하고 농민운동 탄압 분쇄와 수입개방 저지대회 등의 농민운동을 주도하였다. 영동군, 청원군, 괴산군에서는 농축산물 수입 저지를 위한 농민위원회를 결성하고 농민생존권 쟁취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및 농민실천대회와 가두시위를 벌였다. 총연합회는 각 도와 군단위 농민운동을 지원, 독려하면서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1988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노골적인 농축산물 수입개방 요구에 의해 쇠고기 수입이 기정사실화되자 이에 대한 저지운동이 강렬하게 전개되었다. 기독교농민회는 민주쟁취 국민운동 농민위원회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운동을 선포하였다. 4월 22일에는 농민운동제단체와 연합하여 건국대학교에서 2천여 농민이 모인 가운데 농축산물 수입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5월 26일에는 8개 농민단체가 연대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축산물 수입 반대 전국농민 결의대회를 2천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5) 민주헌법 및 민주쟁취운동

1985년 소몰이운동 이후 기독교 농민회는 외국 농축산물 수입반대 운동과 민주헌법쟁취운동을 반외세 반독재운동차원에서 전개하는 한편 농가부채 해결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어나가게 되었다. 이를 위해 기독교농민회는 1986년에 지역단위 운동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농민대중에 기반한 연대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남에서는 3월에 전남지역 농민생존권 확보 및 민주헌법쟁취운동 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선전활동과 농민대회 및 시위를 벌였다. 무안군에서는 무안군 농민운동 협의회를 구성하고 4월 19일 수입개방 저지 및 미국 예속정권 타도를 위한 무안 농민대회를 열었다. 함평군에서는 민주헌법쟁취 서명운동과 미국 예속정권 타도시위가 있었다.

1987년에는 6월 항쟁 이후 7월 8일 기독교농민회, 가톨릭농민회, 가톨릭여성농민회 등 농민운동단체는 국민운동본부산하의 민주쟁취 국민운동 농민위원회와 연대하여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9월부터 기독교농민회는 민주쟁취 국민운동 농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쌀 생산비 보장 운동과 농협 민주화운동을 하였다. 민주쟁취 전남 농민회는 조합장 직선제 및 쌀 한가마 10만원 쟁취운동을 벌였다. 10월 15일에는 전국 11개 농민단체 연대로 농협 민주화 공청회를 실시하고 전농민적 요구인 농협 민주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독교농민회 산하의 화천, 상주, 영주, 무안, 해남 기독교농민회는 현장단위에서 농협 민주화운동과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대중집회를 가졌다.

(6) 농가부채 해결운동

1986년도 기독교농민회 활동은 농가부채 해결운동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독교농민회는 농가부채 해결 전국농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2월 29일 서울과 5개 도에서 동시에 농성을 하였다.

1987년에는 기독교농민회, 가톨릭농민회가 연합으로 「농가부채해결 전국 농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부채 해결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무안, 함평, 강진, 거창군 등지에서 부채조사 활동대회, 공청

회, 시위 등을 벌이며, 농가부채 해결운동을 하였다.

(7) 토지운동

기독교농민회는 1987년에 토지운동을 현장단위에서 다각도로 벌여 나갔다. 무안군 몽탄면에서는 새마을 영농개척단을 조직하고 영산호 간척지를 농민에게 불하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화천군 하남면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빼앗긴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운동이, 해남군 송지면에서도 경지정리 피해보상운동이 벌어졌다. 고창의 삼양영업사 소작농민운동, 홍성의 간척지 불하운동과 서산의 금은농장 소작농운동을 지원하였다.

4.2.3.4. 평신도 농민선교단체로서의 새로운 출발

전국농민운동단체연합의 결성(1989. 3. 1)을 계기로 논의되어 온 농민운동 조직통일이 전국농민회총연맹(1990. 4. 24 결성)의 출범으로 완료됨에 따라 기독교농민회는 정의·생명·공동체를 향한 운동을 전개하는 평신도 농민선교단체로 변신을 도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독교농민회는 평신도 농민선교단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여 왔다.

기독교농민회는 1989년에 간부와 농촌 목회자,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의 간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이념과 위상을 확정하였다.

우선 기독교농민회는 그 이념을, ① 정의운동(하느님의 정의에 입각한 농업·농민문제의 해결운동), ② 생명운동(자연과 인간의 파괴로 경사되는 사회구조를 극복하고 사회와 자연과 인간을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맞게 개조하는 운동), ③ 공동체운동(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확장을 통하여 기초 공동체로부터 조국통일을 완수하는 통일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재정립하였다.

이에 따른 기독교농민회의 임무도, ① 농민운동적 임무(농민운동의 전국적 조직통일과 대중역량 강화에 올바로 복무한다.), ② 교회적 임

무(한국사회와 교회의 갱신을 위해 기독교 사회운동의 일주체로 복무한다.), ③ 기농의 역할(농촌교회와 신자를 주체로 농민선교활동에 임한다.)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기독교농민회의 이념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 속에서 그 활동 방향을, ① 정의로운 토지제도 실현, ② 정의로운 가격제도 실현, ③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농업·농민단체 실현, ④ 제국주의적 살생농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회복, ⑤ 농업 내외적 조건으로 인한 생산농민의 총체적 삶의 파괴 극복, ⑥ 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먹을거리 오염 추방, ⑦ 농촌내에 삶과 운동이 하나로 이어지는 기초공동체 건설, ⑧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 실현 추구, ⑨ 분단된 조국 통일민족이 함께 사는 통일민족공동체 추구로 하였다.

한편 기독교농민회의 1989~ 현재까지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9년은 전국단위에 이어 경북, 충북, 경기, 전남, 전북 등 각 도단위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농민선교단체로서의 기독교농민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갔다. 한편 교회단위 조직기반 조성과 평신도 농민의 훈련을 위하여 교회단위 교육 15회, 도단위 교육 8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9월 8일 힐튼호텔 앞 미국식품반대 시위, 11월 28일 수입개방 저지 농민대회 등의 활동과 평택, 서산, 영암, 완주, 해남, 홍성, 아산군의 토지운동을 하는 농민들을 지원하였다.

1990년 이후는 기독교 농민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저변층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개교회 교육, 회원 교육, 도단위 교육, 전·현직 간부 수련회, 활동가 교육, 실무자 교육, 농촌목회자 세미나 등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기독교농민회를 소개하기 위하여 기농 안내책자, 여성농민회 안내자료, 농민세상 등을 발간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으로 국내 농업이 위기에 처하면서「UR과 한국 농업의 미래」라는 홍보책

자를 1만 5천부 발행하는 등 홍보활동을 했다. 또한 조직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농촌교회 평신도 의식조사, 면 단위 농촌실정 조사, 농번기 탁아실태조사, 농촌지역 의료보험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기독교농민회는 「우리 농축산물 먹기 국민운동본부」결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연대하여 농축산물 수입 반대운동과 도·농간 직거래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5. 한계점과 과제

한국기독교농민회는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출발하였지만 유신독재체제 및 신군부의 농민운동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적 조직운동단체로 체계를 갖추면서 권익 실천활동을 통해 농민의 인간성 회복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농민운동 대중조직체로서의 일정한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기독교농민회가 농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성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대중의 인간성 회복과 권익 실천을 위한 대중주체의 조직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둘째,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일반농민에게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민의 정치역량 확보에 기여하였다.

셋째, 농민·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운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타운동단체 및 농민운동가들을 폭넓게 수용하며, 협력하였다.

- 강인한 농민단결을 견지하며, 농민권익 실현과 지위향상에 매진
을 다짐하기 위한 1·2차에 걸친 농민선언문 채택(1982, 1984)

을 통해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농민의 주장을 천명했다.

- 수십만의 농민대중을 참여시킨 농협조합장 직선제 100만 서명운동(1983)을 통해 농민의 민주농정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 전국 20여 곳에서 벌였던 소몰이 시위와 양담배 판매개방을 기점으로 전개된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운동(1986)을 통해 농민대중의 조직적 힘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한국기독교농민회는 농민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나름대로의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단위(교회 또는 마을)에서의 구체적인 과제의 현장실천을 통해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이 미약하였다.

둘째, 농업·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활동을 쟁취나 투쟁지향적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일반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데 한계성을 보였다.

셋째, 또한 교회(신자)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운동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물적토대 확보가 미흡하였다.

한편 한국기독교농민회가 농민운동의 통일사업에 의해 정의·생명·공동체운동을 향한 평신도 농민선교단체로서의 재출발하면서 그에 걸맞는 운동 방향을 정립하고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농민회가 평신도 농민선교단체로서의 농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정의·생명·공동체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운동 방향과 내용 및 조직체계를 확고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의 재정비와 더불어 운동을 주도해 나갈 활동가의 육성과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운동을 현장 중심의 운동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협동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기반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장

전국농민회총연맹

1. 설립 배경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71년 ‘가농’의 발족과 1982년의 ‘기농’의 발족 등 1980년대초반까지의 농민운동은 종교계통의 조직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또 당시의 사회상황하에서 보면 종교단체라는 울타리안에서 농민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전농조직도 상당부분 이들 조직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 광주사태를 계기로 사회 각계로부터의 민주화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개된 농민운동은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정책에 크게 영향을 줄만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농민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방관적이었던 농민들과 일부 농민운동가들 사이에서 농민운동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직 자체가 종교적인 성격을 탈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기는 하였

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쟁만 계속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중반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의 대두 등 개방농정이 본격화되어 농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농민들과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을 결집하여 농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민운동이 보다 조직적이어야 한다는데 종교단체나 일반농민조직들이 견해를 같이 하면서 농민운동조직의 단일화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후 농민운동단체간에 수 차례에 걸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말 여러 농민단체들이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등 각종 집회 및 시위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개별 단체나 조직의 활동으로는 얻기 어려운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므로써 농민운동조직의 단일조직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농민단체들 사이에서 성숙되었다.

그러나 농민운동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성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존 조직들의 성격이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전농’의 결성 모체가 된 조직들을 간단하게 살펴 본 다음에 ‘전농’의 결성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전농’의 결성 모체가 된 조직들로는 가톨릭농민회(이하 ‘가농’)와 기독교농민회(이하 ‘기농’), 전국농민협회(이하 ‘전농협’) 및 전국농민운동연합(이하 ‘전농연’) 그리고 ‘독자농’ 등이 있었다. ‘가농’과 ‘기농’은 앞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농협’과 ‘전농연’ 및 ‘독자농’의 성립과 활동과정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1. 1. 전국농민협회

1980년 광주항쟁 등 일련의 사태를 경험한 농민운동가들이 ‘가농’의 시대적 상황 대처에 대해 한계를 절감하고 비종교적인 농민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1987년 2월 28일 전남 광주에서 15개

군 농민회가 참석하여 비종교적 농민운동단체인 전국농민협회를 결성하였다. 참가자들은 축산업이나 특작이 아닌 일반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조직은 작목과 문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1988. 1. 12 전남 강진에서 ‘딸기생산자협회’ 준비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비롯하여 1988년 말까지는 80여개 군 농민회가 결성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부당수세 납부거부운동, 수입개방 저지, 부당 의료보험제도 개선, 자주농협 쟁취, 농축산물 제값받기운동, 쌀값 10만원 쟁취를 위한 50만명 서명운동, 해태기업의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 반대운동 등이 있었다.

재정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의 회비(소득의 3%)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가난한 농민들이 많아 실적은 목표의 50% 정도(1988년 현재)에 머물렀다.

1. 2. 전국농민운동연합

그동안 농민운동을 주도해 왔던 가농, 기농 등의 전국 규모단위의 농민운동단체들이 ‘산업근대화 우선논리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운동을 위한 통일된 전국 조직 결성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1988년 11월부터 관련 농민운동단체들은 대표자회의를 비롯하여 10여차례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1989년 2월말에는 규약, 사업 및 조직에 관한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이어 1989년 3월 1일 대전 가톨릭농민회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농연’을 결성하였다. 참가자들은 주로 ‘가농’과 ‘기농’을 중심으로 한 95개군 대표들이었는데, ‘전농협’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요한 활동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989. 3. 4 공화당사에서 ‘통합일원화 의료보험 쟁취를 위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989. 3. 10 ~ 15(장날 선택)기간에는 1989 영농발대식을 군단위로 개최하였다. 또한 1989. 5.

2~3에는 수입 저지와 제값받기 긴급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대전 농민회관에서 전국 44개 군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1. 3. 독자농

1988년 경북 영양지역에서 고추값 하락에 대한 항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 지역은 가농이 조직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농 지도부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위도중 경찰과 농민의 충돌로 많은 농민들이 부상했다. 이 때 농민들은 온건적인 가농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영양 시위의 파급효과는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즉, 그동안 농민운동에 방관적이거나 참여하지 않던 농민들이 ‘가농’과 ‘기농’의 노선에는 불만이 있고, 순수 농민단체를 표방한 ‘전농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농민운동단체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어느 운동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농민들의 조직체로서 ‘독자농’을 조직하였다.

1. 4. 전농의 결성과정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농민운동에 대한 반성이 농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앞으로의 농민운동의 이념과 운동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농민운동조직을 어떻게 어떠한 성격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논점이었다. 이 논쟁은 “아직 농민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원하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역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기존조직 개선론)”는 견해와 “기존의 교회 의존적인 방법으로는 농민의 자주성을 떨어뜨려 농민운동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순수 농민적 조직건설론)”는 견해가 강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양 견해의 중간입장을 취하는 견해까지 가세하여 거듭되었다. 또 1980년대 중반인 1985. 4. 1에는 함평군 농우회가 창립되고, 뒤이어 각 군단위에서의 농민조직이 만들어지

면서 이 논쟁은 이들 농민조직과 ‘가농’, ‘기농’ 간의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7. 2에는 이들 농민조직들이 중심이 되어 순수농민운동단체 성격의 전국농민협회(전농협)가 결성되었다. 이후에도 이들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 단일조직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이루어졌으나 양측의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의 농민운동단체들은 분립된 상태에서 각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국적인 통일조직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게 된 계기는 1988. 11. 17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농민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회는 전국의 14개 농업 농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이 대회가 계기가 되어 “전국농민단체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말 그대로 관련 단체들의 협의기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협의체 결성이 기존의 농민운동단체들에게 조직의 통일을 고려토록 한 계기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후 1988년말부터 ‘가농’과 ‘기농’ 및 ‘전농협’ 등이 전국적 단일조직의 설립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된다. 1989. 1 다시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단일조직의 결합 수준과 위상을 둘러 싸고 단체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표 4-1), 1989. 3. 1 ‘가농’과 ‘기농’ 및 이에 동조하는 일부 군 농민회가 참가하는 전국농민운동연합이 결성된다.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89. 10. 25 ‘전농연’과 ‘전농협’이 공동으로 “쌀값 보장과 전량수매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11. 15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단일조직 설립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 감으로써 비로소 ‘전농’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부터는 단일조직화에 대한 논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1989. 12. 28 양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자농’들이 단일조직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1990. 1. 10에는 ‘독자농’ 대표간사들의 모임을 갖고 단일조직 건설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곧 이

어 1990.1.11에는 ‘전농연’과 ‘전농협’의 임원 연석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0.1.31에는 전국단일조직 건설을 위한 농민단체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전농연’, ‘전농협’, ‘독자농 전국모임’의 대표 34명이 회의를 통해 전국적 단일조직성격으로 “합법적 대중조직”, “군 농민회 주최”, “빈·소농주도”, “변혁 지향”을 표방하는데 합의하였다.

뒤이어 1990.2.1에는 전국단일(통일)조직 건설을 위한 ‘독자농’ 모임이 개최되었고, 1990.2.12에는 전국농민협회(4차 대의원총회)가 해산을 결의하였다. 또한 1990.2.13에는 78개 군 농민회 대표가 참가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0.4.10 준비위원회 총회에서 68개 군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990.4.24를 창립대회일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90.4.24 11:00 서울에서 72개 군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창립되므로써 1980년대 중반부터 논쟁으로만 그쳐 왔던 농민운동조직의 단일화문제는 외형적으로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 농민운동단체의 발생과 통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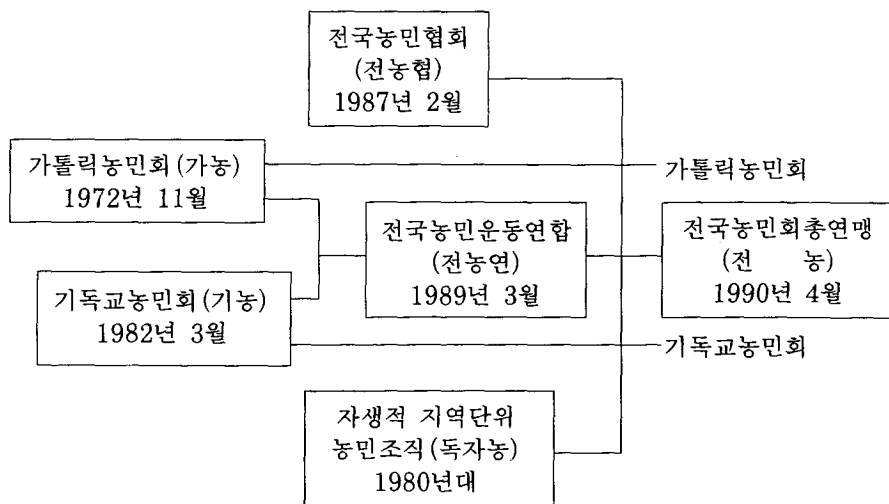


표 4-1 단일조직에 대한 3개 단체(전농협·전농연·독자농)의 주요 견해 비교

구 분		전 국 농 민 협 회	독 자 농	전 국 농 민 운 동 연 합
구 성 주 체	명 칭 회 원	전국농민회 개별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군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합 군농민회 + (여성농민조직, 종교 별 전국조직, 작목별 전국조직, 어 민 조직)
대의원총회		전국대의원대회 군지부대표와 군지부회 원수 비례대의원	기본:군농민회원 50명당1인, 각급 단위(전국, 도, 군)의 회장단과 특 별, 작목, 여성위원장은 당연직 대 의원	200명이하 군조직: 50명당 1인, 200명 이상: 대의원 4명 기본에 100명당 1명 추가, 산하 전국조직은 5명
중앙위원회 (상설의결 기구)		각 군지부 대표와 각 작목 분과장 및 중앙집행위 기능 : 사무처장, 실장 선출	군회장, 도위원장, 전국임원, 특별, 작목, (여성위원장, 처장, 대변인, 정 책실장) * 당연직:중앙위원 1/10범위내에 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각 도연합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30~50명 산하전국조직 1인, 처·실장
중앙상임 위 원 회		없음	없음	의장단, 각 도 위원장, 산하전국 조직대표 1인, 처·실장
중앙집행 위 원 회		회장, 부회장, 처, 실장, 각 도위원장, 중앙위 선출 약간명. 중앙위산하에 교 육, 선전, 조직, 여성 등 전 문위와 재정위 등 위원 회, 사무처, 정책실 설치	전국연맹회장단, 중앙위의장, 특 별, 작목, 여성위원장, 처·실장, 대변 인, 도위원장과 선출직으로 각 도 에서 1인	의장단, 각 도연합사무국장, 산하 전국조직 실무대표, 처·차장, 실 장, 대변인
도 명 칭 조 의결기구 직 성 격	성 격	○○도위원회 없음 도단위 집행기구(지부)	도연맹 없음 도단위집행기구(지부성격)	도연합 정책, 의결기구 설치 도집행, 의결기구(지부성격)
여 성 부 분	명 칭 성 격	여성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중집위산하	여성농민위원회 중앙위 산하	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 가입 산하 전국조직으로 가입
특별위원회		규정없음	중앙위원회 산하에 설치	중앙위원회 산하에 설치
작목별 분과위원회		중앙위원회 산하에 설치	중앙위원회 산하에 설치	산하전국조직으로 참여
재정위원회		중집위 산하	규정없음(전문위원회 산하 설치가능)	규정없음(특별위원회 산하)
산 하 조 직	종교조직 작목조직 여성조직	인정안함 내부조직 내부조직	인정안함 내부조직 내부조직	산하조직(별도조직) 산하조직(별도조직) 산하조직(별도조직)

2. 결성 목적과 활동 방향

전농의 결성목적은 '농민의 지역적 전국적 협력과 단결을 통하여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 권리를 실현하며,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및 조국통일의 실현에 기여' (전국농민회총연맹 규약 제2조) 하는데 두고 있다.

전농의 활동은 농업·농민·농촌문제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농축산물 수입개방, 농산물가격문제, 토지문제,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농가부채, 의료보험(의료보장), 농촌총각 결혼문제 등 전체 농민의 이익과 밀접한 과제들이 주관심사였다.

당해 년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강령에 입각하여 매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되는데, 전농의 활동 방향을 규정하는 강령은 다음과 같다.

- (1) 농민적 농지 소유를 위한 토지 개혁을 실시한다.
- (2) 농업생산과 농산물판매에 있어서 계획화·협동화를 추진한다.
- (3) 농산물 가공 및 농업 관련산업을 농민이 주도하도록 한다.
- (4) 농산물가격을 100% 실현한다.
- (5) 농민의 이익에 반하는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적극 저지한다.
- (6) 독점자본의 농민수탈을 저지한다.
- (7) 농업 보호와 발전을 뒷바침하는 재정, 조세, 금융정책을 이끌어 낸다.
- (8) 자연재해의 복구와 방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한다.
- (9) 농민에 대한 전면적 의료보장제도를 획득한다.
- (10) 농민 자녀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 (11) 빈소농에 우선하여 농민부채를 전면적으로 해결한다.
- (12) 국가부담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

화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게 한다.

- (13) 농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정치적 진출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법, 제도, 관행을 청산한다.
- (14)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권력기관과 각급 대의기구는 농민에 의해 구성, 운영되도록 한다.
- (15) 농협 등 농민 관련 조합을 농민이 장악하도록 한다.
- (16) 여성 농민을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하고, 농촌지역의 일체의 봉건적 잔재를 해소한다.
- (17) 민족의 자존·자주·자립을 손상시키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 억압, 침탈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 (18) 남북 동포간의 긴장과 대결을 종속시키고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한다.
- (19) 억압적인 외세와 독재권력을 물리치기 위해 민족민주운동세력과 굳게 연대한다.

3. 조직화과정

전농 결성 직전인 1990. 3 중순부터 4월초순까지 조사된 군조직 실태 조사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87개 군이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 즉, 이들 조직이 창립시의 회원 조직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남지역이 17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지역이 6개로 가장 적었다. 또한 군 조직들 사이에서도 회원이 분포되어 있는 마을이 5개에서 800여개까지 편차가 심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직운영과 사업방식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회비 납부율만을 놓고 보더라도 10%부터 100%까지 편차가 심하였다. 또 이 중에는 군 조직실태가 조사되기는 하였지만 유명무실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창립 당시에는 지역(군)에 따라 회원 수가 십여명에서 수천명에 이르기까지 격차가 심했

다. 따라서 정확한 농민회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전국적인 회원 수는 2만 5천명 정도였다. 이는 과거 3개의 농민단체들의 회원 수를 합한 것보다도 적은 수자이다. 이렇게 볼 때 전농은 출범과 동시에 기존 조직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미가입지역에서의 조직 구성을 통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동안 분립되었던 농민운동조직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농 결성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단일 조직화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은 상태였다. 먼저 과거 조직들이 분립되었던 시대에 존재했던 대립과 불신관계가 통합후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은 ‘전농’ 결성 준비과정이나 결성후의 활동 방향 및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번째는 그동안 지역에서의 활동은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도력이나 조직력 등에서 지역간에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단일조직체계로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전국단위와 각 단계의 지역단위 조직간에 일관성 및 결합력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결성 당시의 문제점과 한계들은 ‘전농’이 출범과 동시에 조직화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단일화된 조직을 내용적으로도 충실을 기하는 것으로서 이후의 조직활동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추진되었다.

‘전농’이 창립된 1990년에는 결성 시기가 바로 농번기로 접어 드는 때였기 때문에 상반기 활동의 중점을 조직 강화에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 구성단위인 가맹 군 농민회조직을 활성화하며, 면 농민회를 조직하는 한편, 미가입 군 농민회의 가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직사업은 조직국이 관장하였다. 먼저 조직 확대측면에서는 미가입 지역의 군 농민회를 가입시키고, 기존 가입지역을 대상으로는 면 지회 및 마을 분회를 신설 또는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조

직 관리강화측면에서는 기존 군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 모범적인 운영 사례의 발굴, 각급 조직의 운영방안 마련, 조직활동 점검체계 구축, 연수 및 교육을 통한 지도력의 강화, 작목반 조직 및 여성조직의 강화 등을 목표로 세우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2명밖에 안되는 인력으로 이들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는 조직 정비와 확대·강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앙단위 실무자들이 주요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한편으로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농은 조직의 결속이나 확대를 중앙단위에서의 시위나 집회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하면서 강화해 나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단위에서의 이러한 시위가 여러 농민들에게 전농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을지라도 지역 조직의 확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위에서 언급한 방향과 사업들이 조직화를 위한 기본체제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하는 군 농민회가 있는가 하면 기존 조직중에서도 지도력과 조직력이 결여되어 유명무실했던 지역이 탈퇴하기도 하여 전농이 결성된지 3년이 지난 1993년 현재의 전체 회원 조직수는 창립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약 90여개 정도이다(표 4-2). 1993.5 현재 강원지역과 경기지역에서는 창립 당시보다 오히려 1~2개 지역이 줄어든 반면, 충남지역과 전북지역은 창립 당시와 변함없고 충북, 경북 및 전남지역에서 1~2개 지역이 추가로 가입하여 전국적으로는 90여개 군에 군 농민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외에 제주도에는 5개 읍면 농민회가 구성되어 있다. 즉, 창립 당시에 비해 3개 군 정도가 추가로 가입한 실정이다. 그동안 탈퇴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제외된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3년동안 3개 지역이 확대되었다면 조직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창립 당시 미가입했던 지역

표 4-2 전농의 회원조직(군단위) 실태

단위: 군(농민회)

지 역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창립시	9	6	8	11	12	17	15	9	87
현 재	7	5	9	11	12	19	16	11	90
증 감	-2	-1	1	-	-	2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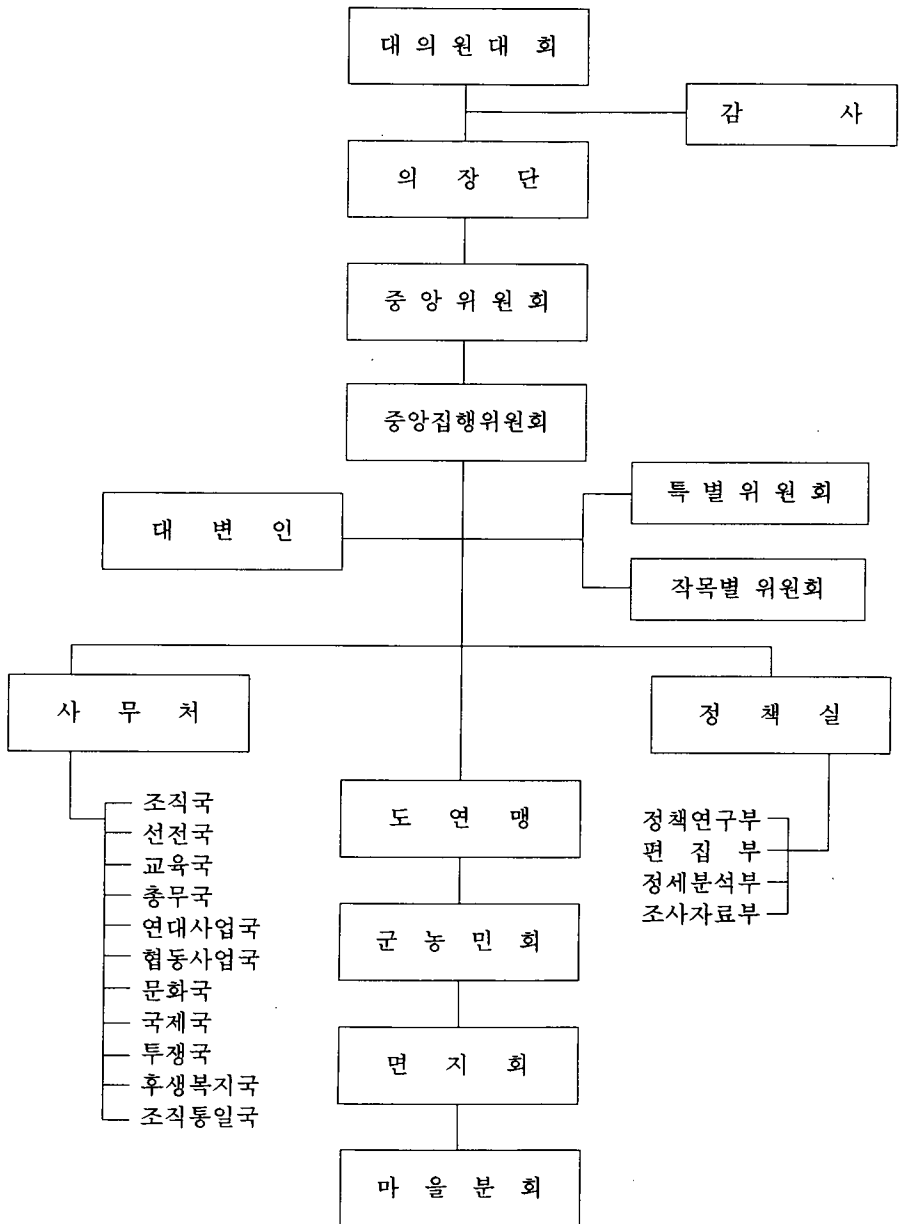
들은 나름대로 조직 구성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운영체제와 주요 활동

4.1. 조직 구성

전농의 조직 구성은 크게 중앙단위와 지방단위로 나뉘어진다. 중앙단위에는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 상임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상설의결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실무집행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와 감사, 의장단, 대변인, 특별위원회, 작목별위원회, 경제협동사업단, 사무처 및 정책실이 있다. 중앙단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에는 조직국, 선전국, 교육국, 총무국, 연대사업국, 협동사업국, 문화국, 투쟁국, 후생복지국, 국제국, 조직통일국 등이 있으며, 각종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및 대안을 준비하는 정책실에는 정책연구부, 편집부, 정세분석부, 조사자료부 등이 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그동안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경제협동사업 특별위

그림 4-2 전국농민회총연맹 기구표



원회, 조국통일 특별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역단위조직은 도 연맹, 군 농민회, 면 지회, 마을 분회로 구성된다(그림 4-2). 도 연맹은 연맹에 가입한 5개 군 농민회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총연맹 대의원 또는 그에 준해서 구성·운영하고 아울러 운영위원회(상설 의결기관)와 집행위원회(상설집행기관)를 두어 운영한다. 이에 비해 군 농민회, 면 지회 및 마을 분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상설의결기관으로는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월례회를 각각 두어 운영하고 있다.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경제협동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특별회비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충당된다. 회원의 회비는 회원수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안정적인 수익사업도 아직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재정사정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4.2. 주요 활동상황

전농의 각종 사업 내용은 각 부서별로 계획된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조직이 주관하는 것과 지방단위조직이 주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들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부서 어느 단위의 조직이 주관하는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조직이 참여 내지 협조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농의 활동중에서 농정 전반에 대하여 조직 전체가 참여했던 활동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큰 활동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연도별로 몇 가지씩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사무처를 중심으로 한 각 부서의 활동영역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전농이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나 활동을 개관하는 것으로 한다.

먼저 대변인은 농정 전반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인터뷰,

원고 기고 및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한다. 정책실은 기관지, 농민통신 및 각종 정책자료 등을 발간하며, 각종 대회나 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에 비해 선전국에서는 신문을 제작하고 각종 선전물을 제작하여 홍보 및 선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직국에서는 전농의 조직화 전반(조직 확대, 조직 강화, 조직 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국에서는 지역단위 및 중앙단위의 지도자교육 및 농민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협동사업국은 각종 구매사업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후생복지국에서는 전문의료인과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농민들에 대한 보건진료활동 등 농민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연대사업국은 정당, 재야운동단체, 학생단체, 환경단체 및 여타 농업 농민단체와의 연대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안별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농의 활동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이나 활동이 있는가 하면 상당부분은 자체의 인적·물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목표수립 정도에 머무른 것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4.2.1. 1990년도의 활동상황

4월 24일 전농이 결성되었으나 바로 농번기로 접어들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조직정비작업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거부 및 농산물 제값받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전농이 1990년에 전개한 주요 활동사항을 정리해 보면 의료보장 쟁취운동, 두 차례에 걸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거부, 농어촌발전대책 분쇄 및 농산물 제값받기운동, 쌀값 보장 및 전량수매 쟁취운동 및 민중대회 참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4.2.1.1. 의료보장 쟁취운동

1990년 3월부터 농촌지역 의료보험료가 평균 30 ~ 70%까지 대폭 인상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6.5)에서는 의료보장쟁취운동을 1990년 여름의 중심과제로 결정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의료보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의보특위는 활동이 부진하여 자료집을 2회 발간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도 및 군단위에서는 특별위원회마저도 구성되지 않아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다만 전남의 나주, 해남, 화순 등지에서 차압에 항의하는 조합 방문, 교육 등이 진행된 것과 전북 여성농민위원회에서 진행한 9개 군의 조사사업활동 및 경북지역에서의 서명운동과 이의 신청활동이 실시된 것이 활동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4.2.1.2. UR 농산물협상 거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분쇄 및 농산물 제값받기운동

1990년도 하반기의 농민운동을 고양시키고, 농업위기·농민문제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반정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는 목표하에서 2차에 걸쳐 'UR 농산물협상 거부, 농발대(농어촌발전종합대책) 분쇄 및 농산물 제값받기운동'을 추진하였다. 1차대회는 9월 7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9개 도에서 개최되었는데, 경찰들의 원천봉쇄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3만 5천여명이 참여하였다. 이 대회는 전농이 결성된 후 첫번째의 전국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조직의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 9월 22일에도 1차대회의 분위기를 군단위까지 확산시키기 위하여 2차대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전국 45개 군에서 7천여명이 참여하였다. 1차대회가 열린 지 보름만에 동일한 성격

의 대회를 재차 추진한 것은 1차대회의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급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치밀성이 떨어졌고, 1차대회가 열린 지 얼마 안되어 농민들의 호응도도 반감된 상태에서 각 군단위에서 진행된 대회를 중앙단위에서 일일이 지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 각 지역의 조직력 및 준비 정도에 따라 그 성과에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1차대회에 훨씬 못미쳤다.

한편 1986년부터 진행되어 온 UR 농산물협상과정이 그동안 국내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농업에는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농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농민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학생단체, 소비자단체 및 여러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 거부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를 9.28일 결성하였다.

4.2.1.3. 쌀값 보장 및 전량수매쟁취운동

추곡 수매값의 실질적인 인상과 전량수매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UR 협상 및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허구성을 폭로한다는 목표하에 이 운동을 전개했다. 먼저 9.7 및 9.22 대회에서 “쌀값 129,767원 보장과 전량수매”를 요구하였고, 10월 18일에는 쌀 수매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1월 12일을 전후해서는 전국 50여개 군에서 9.22 대회에 이어 3차대회를 개최하여 일반벼 42.4%, 통일벼 36.6%의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였다. 이날 벼가마 불태우기, 이장단의 수매 거부 및 사표 제출, 고속도로 점거 등의 형태로 시위가 전개되었다. 벼가마 불태우거나 수매 거부 등의 시위는 11월부터 12월말까지 전국에서 계속되었다. 또 12월 4일에는 50여명의 농민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쌀값보장, 전량수매”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문제는 대다수 농민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장단 및 지역 농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의 수매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4.2.1.4. 기타 활동

이외에 한창 봄이 일기 시작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전개된 것을 비롯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대회(경북 울진, 9.2) 및 핵 폐기물 처리장 설치계획 반대운동(충남 안면도, 11.4~7) 등 농촌환경과 관련한 대회 및 시위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4.2.2. 1991년도 활동 상황

1991년에도 쌀 전량수매를 비롯하여 국민의료보험법 통과 요구 및 이를 위한 대국회운동을 벌이는 한편, 마늘값 폭락에 대해 항의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골프장건설 반대 시위, 산업 폐기물 처리장 폐쇄운동과 잎담배 수매운동 및 옥수수 불량종자 손해배상운동 등이 지역적으로 전개되었다.

4.2.2.1. 3·23 전국농민대회

3월 23일 전남대에서 '국민의료보험법 및 1990, 1991년 쌀 전량수매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장소를 조선대에서 전남대로 옮긴 가운데 1천여명의 농민을 비롯하여 시민, 학생 등 2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대회의 주목표는 1990년산 통일벼 수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4.2.2.2. 국민의료보험법 재의결운동

국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의료보험법이 대통령의 재가과정에서 대통령(노태우)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중이었는데, 13대국회가 종료

됨에 따라 자동폐기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국민의료보험법 재의결을 4월 국회에 상정시킨다는 목표하에 의료보험공동대책위원회 및 의료보험연합회 노조와 공동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홍보전단을 제작·배포하고, 일부 군 농민회에서는 의보조합을 항의방문하였다. 또 4.24에는 장충단공원에서 국민의료보험법 재의결 촉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4.26에는 국회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4.2.2.3. 마늘값 폭락에 따른 대응

5월 중순 이후 1990년산 저장마늘가격이 kg당 6백원 내지 4백원(난지형)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농민들은 이러한 현상이 정부가 마늘 수매를 시가의 2/3 수준(kg당 995원)에서 제한수매하겠다는 발표 때문이라고 보고 적어도 생산비 수준의 수매를 요구하였다. 요구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품종별로 마늘 생산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한지형 마늘의 경우 전년도보다 작황이 좋지 않아 7월 초에는 마늘가격이 전년 동기 수준까지 회복됨으로써 생산비 수준의 수매요구 주장은 의미를 갖지 못했다.

4.2.2.4. 쌀 문제への 대응

정부·국회의 추곡수매 논의과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년과는 달리 농번기(수확기)에도 대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관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는 판단하여 평야별 결의대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예당평야(10.1), 호남평야(10.8), 강원 영서지역(10.25), 충북 중부지역(10.25), 나주평야(10.25) 등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 아울러 10.25에는 전국적으로 1일 추수파업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50여개 군에서 각 군 농민회가 독자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어 11.26에는 장충단공원에서 전국의 57개 군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쌀 수입 저지와 쌀값보장, 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추곡 수매

시기에는 벼가마 적재시위 등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12.15에는 국회 앞에서 200여명이 참가하여 수차례 연행되는 가운데서 전량수매 요구 및 추곡 수매안 날치기 통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당시 ‘전농’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수매가는 통일벼는 10%, 일반벼는 15%씩 인상하고, 수매량은 1,200만석 이상으로 하여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추곡 수매는 정부수매방침대로 결정되어 11월부터 실시되었다. 이에 1992. 1.21에는 추가적인 추곡 수매를 요구하는 시위가 명동성당에서 있었는데, 회원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회원 수에도 훨씬 못미치는 30여명만이 참가하는데 그쳤다.

4.2.2.5. 기타 활동

1991년은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농민회원들의 기초 및 광역의회 진출을 위한 시도가 ‘전농’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했다. 선거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75명 정도가 출마하여 6명이 당선되었다.

이외에도 제주, 충북, 경북 등지에서의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 충남 아산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 폐쇄운동, 충남 음성 등지에서의 잎담배 수매운동, 강원 평창 등지에서의 옥수수 불량종자 손해보상운동 등이 지역적으로 전개되었다.

4.2.3. 1992년도 활동 상황

1992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쌀값보장 및 전량수매, 잎담배 제값받기 등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또한 1992년의 총선 및 대선을 계기로 공정선거실천운동, 농업대개혁쟁취운동 및 상경투쟁 등 정치적인 활동도 전개되었다. 1992년도의 활동이 이제까지와 다른 양상은 정부청사 및 국회 앞에서의 농성 등 상경투쟁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2.3.1. 양파값 폭락에 대한 대응

양파의 재배면적 증가와 풍작으로 5~6월에 가격이 폭락하여 양파재배 농민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어 일부에서는 양파밭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전농에서는 정부의 양파 수매량을 확대하고, 수매가격도 생산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파 15만톤 이상, 마늘 10만톤 이상을 정부가 수매하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하여 비축물량 방출을 중단하는 한편 양파 및 마늘에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를 홍보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공청회와 대중집회 등이 계획되었으나 양파재배지역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다수 농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얻지는 못하였다.

4.2.3.2. 잎담배 제값받기운동

1991년부터 전개된 잎담배 제값받기운동의 일환으로 서명운동과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생산비조사 및 각종 모임이나 대회 등을 전개함으로써 1992년도 수매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이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지도력의 부재로 서명운동과 설문조사는 계획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앙단위에서도 준비가 부족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항의방문하는 수준에 머물었다.

4.2.3.3. 쌀 문제への 대응

정부가 UR에 대비하여 수매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려고 한다는 판단에서 1992년도 쌀문제의 대응 방향을 수매제도의 존속 및 발전으로 잡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매가격 15% 인상과 1,100만섬 이상 수매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미중 일반벼의 방출가를 현실화하여 산지 쌀값의 폭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학교의 무급식 전면 확대, 재해 지원, 각종 후생

복지사업 및 군대 급식 등을 전면 쌀로 일원화하고 양곡관리에 따른 결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 양특적자의 누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운동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각 정당까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특히 1992년은 대선이 있는 해였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추곡 수매에 관한 정책결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각 당은 정부 수매안(5%, 850만섬)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3당이 추곡 수매안(7%, 960만섬)을 합의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안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는 않았다.

정부의 수매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 농민대회(9월), 추수파업(10월) 및 군대회(11월) 등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추수파업은 다수 농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철회되고, 동시에 각 지역에서 갖기로 한 군 대회도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등 지역에서의 각종 활동은 다수 농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에서의 활동이 이러한 가운데 중앙단위에서도 몇 가지 운동이 전개되었다. 먼저 9.1 ‘쌀값보장, 전량수매 및 농업대개혁 쟁취를 위한 농민투쟁 선포식’을 개최하였는데, 6개 도에서 8천여명이 참석하였다. 단지 쌀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당면한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업대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대선을 약 4개월 정도 남겨 놓은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대회에는 여타 농민단체들은 물론 일부 야당에서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지역단위까지 이를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9.3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UR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방한한 던켈 가트 사무총장에 대한 국내 농민들의 항의표시로 80여명의 농민들이 세종로에서 숙소인 롯데호텔까지 시위를 벌였다.

또한 11.9~10에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파천 정부청사 1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연행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과는 별도로 미군 PX를 통해 불법유출되는 미국 쌀문제를 여론화함으로써 쌀 개방압력을 넣고 있는 미국의 의도를 국민들에게 폭로하고,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군 책임자의 고소 및 방문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적인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취소되었다.

4.2.3.4. 기타 활동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는 골프장 건설 반대 및 잎담배 구매 거부운동이 전개되었다. 한편 199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공정선거 실천운동, 민주후보 지지운동 등 대선과 관련한 시위나 집회 등을 독자적으로 또는 일반운동단체와 공동으로 전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2.4. 1993년 이후의 활동 상황

1993. 2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농정을 표방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논란속에 진행돼 온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협상기한내에 가까스로 타결되었다. 게다가 봄부터 여름까지 지속된 이상저온현상으로 각종 농작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1993년의 활동은 주로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와 중대농 위주로 되어 있는 신농정계획에 대한 수정요구 및 냉해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요구가 주축을 이루었다.

4.2.4.1.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운동

농업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만을 앞세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점과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기초 농산물의 수입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활동이 전개되었다. 대통령에게는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를 직접 표방하고 수입개방 이행계획서 제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농산물 수입 개방과 관련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2. 16에는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가트(GATT)에 대한 국제농민 연대회의'를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또 7. 10에는 클린턴 방한 반대 농민대회를 서울 명동일대에서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졌다. 11. 12에는 '추곡수매쟁취, 냉해보상, 농산물 수입저지를 위한 전국농민 비상대표자대회'를 서울 탑골공원에서 갖고 서울역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 대회도 여러 농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및 재야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일부 농민들은 국회의 원회관을 점거하고 국회 정문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민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하기도 하였다. 또 이튿날인 11. 13에는 '전농' 회원 100여명이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다가 전원 연행되어 즉결심판을 받았다. 한편 11. 29에는 '한국농업사수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적으로는 벼가마 적재운동, 수매 거부, 항의농성 등을 전개하였다. 12. 7에는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채회의 국민대회'가 농민 5천여명 등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열렸다. 12. 12에도 유사한 시위가 탑골공원에서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이 12. 15 최종 타결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단위에서는 추곡 수매문제와 냉해피해 보상운동 등보다는 당장 연말로 다가 온 UR 협상의 타결시한을 앞두고 그 타결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지역에서도 이와 병행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었다. 즉, 과거와 같은 추곡 수매시기의 벼가마 적재운동 등이 지역적으로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과거와 같이 활발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등 농정 전반에 대한 운동에 더 비중이 두어졌던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이 12.15 타결시한에 맞춰 최종 타결되었다. 이에 국회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대회(1994.1.24)가 충남 아산지역에서 열리고 이어 1994.2.1에는 9개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서울 대학로에서 'UR 재협상, 국회 비준 거부와 농정 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농민, 시민, 학생 등 4만여명이 참가하였다.

4.2.4.2. 냉해피해 보상운동

1980년에 이어 13년만에 닥친 이상저온현상은 쌀뿐만 아니라 밭작물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에 냉해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10.25 전북 장수군 농민대회를 비롯하여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재해보상에 대한 전농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 보면 먼저 냉해조사는 수확후 수확량을 토대로 하여 정확히 조사해야 하며, 조사과정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농가피해 복구와 농업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이 최대한 강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번째는 이러한 재해보상만으로는 궁극적인 재해극복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농업재해보험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4.2.4.3. 신농정 반대운동

문민정부가 표방한 신농정은 농업 붕괴를 전제로 농지를 축소하고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을 포기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개방 및 소수 전업농을 위주로 하는 농업 포기정책으로서, 식량 자급은 물론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농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신농정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7.22 농림수산부를 항의 방문하고 11.19에는 농림수산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신농정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는 지역에서의 각종

집회나 시위시에 아울러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농정 작업반 참여문제를 놓고 조직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로 인한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되기도 했다.

4.2.4.4. 기타 활동

이외에도 통합의료보험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9.19), 잎담배 생산권 보장 및 공사 민영화 반대 전국경작농민대회(11.5), 감귤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제주도민대회(11.6), 한농종묘를 대상으로 배추 불량종자 보상운동(12.21) 등이 있었다.

5. 한계점과 과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농’의 결성은 그동안 존립했던 ‘가농’, ‘기농’ 및 ‘독자농’ 등의 농민운동단체들을 하나로 결합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농민운동단체의 통합문제가 제기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도 적지 않았지만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하나의 조직체를 형성한 것은 농민운동사에서 분명히 하나의 업적으로 평가될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앞으로 ‘전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물론 결성된지 4년 정도로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조직형태를 갖추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성과정에서 존재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이라든지 지난 4년 동안의 활동결과를 살펴 볼 때 앞으로 ‘전농’이 다수 농민들의 진정한 대표성을 갖는 조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하겠다.

첫째, 기존의 농민운동단체인 ‘가농’과 ‘기농’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보면 농민운동단체의 통합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밖

의 단체나 조직들을 포괄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4년 동안 일부 단체들과는 사안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하였으나 기존의 각종 경제단체나 협의회, 교육지도단체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수용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단일조직화 이전에 분립된 상태에서 존재했던 부분적인 갈등들이 단일조직을 결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조직이 단일화되므로써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갈등문제들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통합 이전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농'이 보다 발전된 조직으로 성장·발전하려면 이러한 갈등관계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농'은 재원을 회원의 회비,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회원 수도 적을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조직의 운영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건실한 조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생산자단체나 품목별 협의회, 교육지도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방안과 함께 다수 농민을 회원으로 확보하는 등 경제적 자립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농'이 '가농', '기농' 및 '독자농' 등을 통합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농민회원들이 그대로 '전농'에 소속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농'의 회원 수는 과거 3개 조직의 회원 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회원 수의 감소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회원들을 그대로 받아 들일 정도의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결속력은 통합 전에 개별조직으로 존립했던 때보다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갈등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데 기인할 수도 있고, '전농' 결성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할 수도 있다. 여하튼 과거의 여러 조직들을 통합하여 앞으로 농민들의 권익을 광범하게 대변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직인 군 농민회를 활성화시켜야 하

며, 군 농민회 회원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조직적 성격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목반들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한편, 새로운 작목반의 조직 및 기존 작목반의 운영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 결성 배경

여성농민운동은 1977년 가톨릭농민회 여성부와 가톨릭농촌여성회(뒤에 가톨릭여성농민회로 개칭)가 출범하면서 조직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농촌 여성의 의식화를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때의 활동 내용은 농촌 여성의 계몽 및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생활 개선을 위한 공동활동(악품합관리, 작은 가축 기르기), 공동체적 삶을 체험하기 위한 협동활동(공동모내기, 공동빨래터, 공동취사장) 등이었다.

이렇게 진행되던 여성농민활동은 1980년대 들어 개방농정이 실시되면서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즉, 1980년 광주사태 이후 농민운동이 자주 발생하는 과정에서 여성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써 농민 절반(즉, 여성농민)의 역할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여성농민들도 정권 내지는 정책에 대항하여 농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농지세 시정운동, 농협 민주화운동, 부당경지정리 반대운동 및 각종 잡부금 거부운동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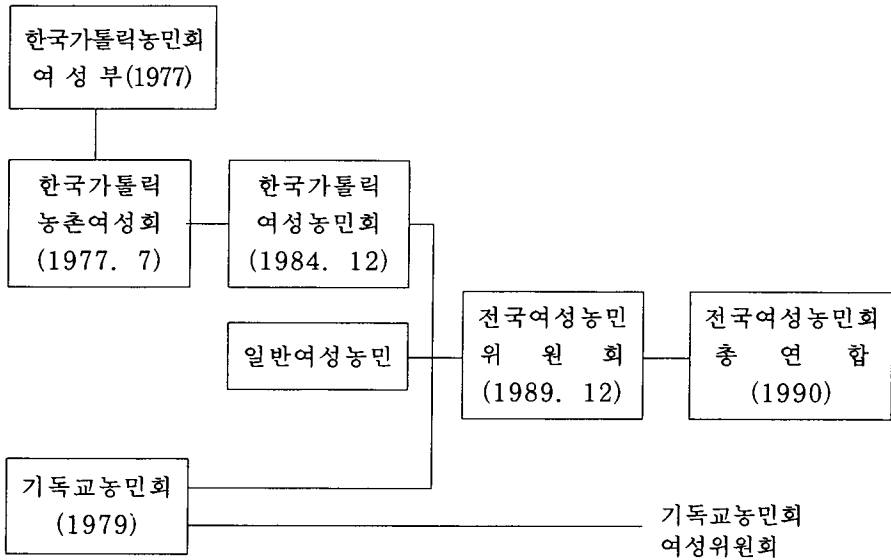
나아가 1987년 6·29 선언으로 그동안 자제돼 왔던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되는 가운데 1987, 1988년에도 일련의 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수세 거부, 고추싸움,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및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운동에 여성농민 일부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하여 농민운동에 직접 동참하거나 그동안 관심을 가져 온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농민 나름대로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단위 여성농민활동가 만남이 연 1회 정도 마련되었으며, 모임때마다 여성농민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실천과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위원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그 역할이 막연하고 조직적 강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이나 성과가 없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후 별다른 상황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1988.12에는 여성농민운동가들의 간담회가 망년회를 겸해 열렸다. 전국에 흩어져 나름대로 농민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농민운동 상황, 여성농민운동 조직화의 사례와 여성농민조직의 위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농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조직 구성작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9.3에는 제1차 활동가 간담회에서 '전국 여성농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989.8의 제2차 활동가 간담회에서는 전국조직의 활동 내용과 역할 및 위상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조직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진행되어 1989.12.18에는 전국에서 50여개 군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여성농민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단일 여성농민운동조직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각 지역별로 도 및 군단위 여성농민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결성되거나 준비작업에 들어 갔다.

전국여성농민위원회는 1990년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5-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결성과정



2. 결성 목적과 활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그 결성목적을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마을, 면, 군, 도 여성농민 대중의 당면운동을 지원하고, 자주적 여성농민조직을 건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칙 제2조) 하는데 두고 있다.

한편 여성농민의 중심과제도 기본적으로 농업·농민·농촌문제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농민회의 활동과제는 앞에서 살펴 본 '전농'의 활동과제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그중에서 탁아 및 육아문제, 여권신장운동, 여성문제상담, 판매사업(직거래 장터 등) 등 여성농민 자신들의 권익 신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들이 군 농민회 활동과제와는 다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제

들도 크게 보면 ‘전농’의 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조직화과정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89년말 ‘전여농’은 전국단위 여성농민 조직으로서 출발하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조직 구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또 지역별로 조직 구성의 편차도 심한 실정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 여성농민위원회가 결성되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도단위 조직이 활동가들의 소모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또 조직이 결성된 지역이라도 각종 사업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갈 만한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활동가들이 속한 지역에서는 그런대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나 두드러진 지도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활동이나 조직 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전여농’은 출범하면서부터 조직의 확대보다는 기존 조직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마을단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용 교재로는 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를 비롯하여, 기관지(‘여성농민’)와 정세분석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교육 내용은 군 농민회의 조직방법, 각종 회의 진행방법, 탁아문제 등 여성농민의 당면문제를 비롯하여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신농정 및 농산물 수입 개방 등 농정 전반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회원 조직이 많은 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몇 명의 사무처 직원들만으로 이러한 교육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교육의 결과를 곧바로 조직의 강화나 확대로 연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조직의 강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각급 조직 회장단 및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찬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조직의 확대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농민조직화가 부진한 원인의 하나로 ‘전농’과의 불분명한 관계를 들 수 있다. 여성농민회는 당연히 군 농민회(‘전농’의 군단위 조직)의 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군 농민회내에서의 여성농민회의 위치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어떤 지역에서는 군 농민회내에 여성농민위원회나 부서로 위치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군 농민회와는 별도로 군 여성농민회가 조직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별도 조직이나 부서를 전혀 형성하지 않고 군 농민회의 일반회원으로서 존재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띠었다. 이러한 사정은 중앙단위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조직의 강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전농’과의 위치 설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1992년 현재 지역의 여성농민회 조직을 보면, 마을·면조직이 되어 있는 지역이 50여개 군이며, 군 여성농민회가 공식적으로 결성되거나 군단위활동이 되고 있는 곳이 25개 군, 도 여성농민회연합이 공식적으로 결성된 곳이 4개도, 도단위 여성농민활동이 준비되거나 진행된 곳이 4개 도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조직은 강력한 지도자의 존재 여부, 여성 농민들의 참여 정도, 지역적 당면문제의 공통관심사의 정도 및 그 지역 ‘전농’ 회원들의 협조 정도 등 지역적인 사정에 따라 조직력이나 활동 상황이 천차만별인 상태이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단일 여성농민운동조직이 구성되어 조직화를 위한 활동이 추진되기는 하였지만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조직 강화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조직 확대측면에서는 결성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4. 운영체제와 주요 활동

4. 1. 운영체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조직은 크게 중앙단위와 지역단위로 나뉘어지며, 중앙단위조직은 지역단위조직들의 연합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체제는 기본적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단위기구로는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 특별위원회, 임원단(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및 사무국이 있다. 또 사무국에는 정책연구부, 조사선전부 및 조직교육부 등 세 개의 부서가 있다. 이들 세 개의 부서가 사업 전반을 분장해야 하므로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사무국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 이상의 직책을 맡고 있어 타 단체에 비하면 훨씬 과중한 업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조직으로는 군 여성농민회와 면 조직 및 마을단위조직이 있는데, 군 조직은 전여농의 기본 가입단위가 된다. 기본 가입단위(전여농의 회원단체)는 2개 마을 이상의 여성농민조직이 있는 군, 1개 이상의 면 여성조직이 있는 군 또는 전국농민단체의 여성위원회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 군 조직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 여성농민회 또는 마을 조직 대표(2개 이상 마을)가 가입할 수도 있다.

군단위조직은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대로 지역별로 조직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형태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재정은 회원단체(군 여성농민회)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사업 수익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회원단체들의 조직이 아직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기존의 조직들도 전반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물론 사

무실 운영비 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2. 주요 활동 내용

‘전여농’이 1989년말에 창립되기는 하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활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또 조직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활동의 정도가 천차만별이었다. 따라서 ‘전여농’은 창립 당시부터 조직의 확대 및 활성화가 지상과제였으며, 또 지금까지 마을단위에서부터 전국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 활동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왔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일반농민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 동안 여성농민들의 경우 주체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기보다는 가장인 남성의 지휘나 통솔하에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여성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한 여성농민들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소수에 불과해 여성농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성농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지역활동에 참여시키고 이를 지속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개별 여성농민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전여농’은 창립 당시부터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인 공통관심사를 찾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마을단위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최대과제였다.

여성농민들의 공통관심사는 지역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데, ‘모성’ 보호, 탁아, 육아의 문제, 농부병, 부인병 등 여성건강문제 등이었으며, 때로는 지역의 당면문제로 대두된 골프장 건설 반대와 같은 환경문제 등이 여성농민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활동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기에는 인적·물적 여건이 취약하여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농’의 사업이나 활동에 동참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는 여성농민회가 창립된 이후 전개한 활동들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및 농어촌발전대책에 대한 반대 등 농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농정 실패에 대한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중에는 여성농민회 단독으로 전개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농 및 기타 농민단체 또는 재야운동조직들과 연대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비조사에 근거한 제값받기운동 및 수입 농산물의 유해성과 국민건강, 민족자존의 문제에 대한 선전, 교육을 전개하였다.

둘째, 학교급식 완전실현을 위한 운동이다. 1992년도 하반기 활동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쌀 전량수매를 위한 학교급식 완전실현 서명운동’ 전개를 결의하고 학교급식 완전실현을 위한 서명활동을 1992. 10. 1부터 시작하고, 11. 12에는 ‘쌀 전량수매 학교급식 완전실현 1992 전국여성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학교급식의 목적에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의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학교급식의 확대보급을 도모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1992. 11. 12 대회에서 선포한 ‘여성농민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들 수 있다. 개혁안에는 여성농민의 생활과 지위 향상을 위한 주장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여성농민이 이 사회의 어느 집단 못지 않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특히 국민을 먹여 살리며, 국가산업의 기초가 되는 농업을 지키는 중요한 농업노동의 절반을 담당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대가와 지원,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②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젊은 사람들이 누구도 놀려 살려 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편의시설이나 문화, 복지, 의료, 주거, 교육, 교통 등의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에서 농업을 지키고 사는 만큼, 여성농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농어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③ 여성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항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게 여성농민 지도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며, 또한 아직 우리 사회, 특히 농촌지역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봉건적 관습을 폐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등이다. 회원들에게 이러한 개혁안 내용을 홍보·교육하기 위하여 기관지(‘여성농민’) 및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 마을단위 교육시에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토론회나 좌담회의 개최 및 참가, 성명서 발표 및 경제활동사업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 지역에서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위주로 해당지역 여성농민회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골프장 건설 반대,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등 운동적인 성격의 활동과 아울러 젓갈류 판매사업 등 경제사업도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5. 한계점과 과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결성된 지 5년 정도 경과하였다. 시간적으로만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조직 구성이 본 궤도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결성 당시의 취약한 조직형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화활동들도 나름대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인력과 재정사정 등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므로써 조직화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조직으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전국농민회총연맹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을 통해 ‘전여농’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전농’과 ‘전여농’은 각각 독립된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살펴 보면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전여농’의 임원이나 간부들은 ‘전농’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조직이나 단체에서 일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농’과 ‘전여농’은 넓게 보면

활동분야와 과제들이 상당부분이 동일한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조직의 활동인지가 불분명하게 된다. 더욱이 지역단위조직의 경우 여성부 또는 일반회원 등의 형태로 모두 군 농민회(전농)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활동을 구분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외적으로는 '전여농'의 존립의 당위성을 표방하고 조직내적으로는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여농' 고유의 활동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활동영역을 물리적으로 양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느 분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둘째, 첫번째 과제와도 연관되는 것이지만 여성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 물론 여성농민들도 농업·농민·농촌에 관한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 중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라든가 여성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타 농민단체에 비해 결속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농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여성농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선은 마을이나 면 또는 군단위지역에서 여성농민들의 공통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활동의 중심 내용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매사업이라든가 농번기 탁아소 설치 등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역에서 앞장서서 추진할 지도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지도자 확보가 시급하다. 현재의 중앙단위 사무국의 소수 인력만으로는 현재의 활동마저도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이므로 조직의 강화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지도자 연찬회나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

다. 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훈련활동이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수 운동적인 접근과는 달리 여성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종 경제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도자를 육성·발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표 5-1 여성농민 개혁안

I. 여성 농민의 농업생산주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한다.

1. 여성 농민의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실현한다
 2. 여성 농민 농업노동의 기계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3. 농협 등 농민 관련 단체의 여성농민의 조합원자격을 보장한다
 4. 정부의 전업농 지원, 후계자 양성사업에서 여성 농민에게 일정 비율의 지분을 배정한다.
 5. 여성 농민들이 특기로 갖고 있는 식품 가공업의 제조·판매사업을 지원한다
 6. 여성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유통활동을 지원한다
-

II. 여성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농어촌의 제반환경을 개선한다

1. 여성 농어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2. 농어촌지역에 국공립 탁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3.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어민 자녀의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4.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5. 면·군단위에 문화·오락·사회교육시설 등을 공립으로 설치·운영한다
-

III 여성 농어민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반 정책을 시행한다

1. 농어촌지역에 많이 남아 있는 봉건적 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지역사회에서 여성 농어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여성 농어민들이 통일의 주역으로 나서기 위해 남북간 여성농민들의 교류를 지원한다
-

제 6 장

농민운동단체의 조직과 활동방식

1. 조직방법

어떤 운동단체이든 그 조직과 활동방식에서 일반적으로 종교조직과 대중조직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기독교농민회나 가톨릭농민회가 1980년대까지 벌여 온 농민운동의 성격은 경우에 따라 종교적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대중적 농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 왔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시의 대중적 기반을 둔 민간운동단체가 없었으며, 정치·사회적 분위기로서는 대중적 농민운동단체의 구성이나 성장이 어려웠던 시기였으므로 농민운동가들이나 운동적 활동가들의 구심점이 자연히 종교적 우산 속에서 힘겹게 버티어 가고 있던 가톨릭농민회 또는 기독교농민회에서 자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말 종교적 운동단체의 한계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비판과 '가농' 자체의 내부적인 갈등이 표면화되면서(1987년 '가농' 활동제재에 관한 주교회의 결정) 종교조직과 대중조직의 구분의 명확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이 때부터

종교적 농민운동단체의 위상 정립과 자주적 농민대중조직의 발족이 촉구되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의 농민대중조직들이 발현했고, 이들을 통합한 하나의 연합조직을 열망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 이후 대중운동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탄생을 계기로 ‘가농’과 ‘기농’은 본래의 종교운동으로 재편되었으며, 선교적 활동으로서 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한 생명공동체운동과 그리스도 사랑실천운동으로 한계를 지어 가게 된 것이다.

농민대중 운동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대중여성조직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조직방법에 있어 공개 합법적인 조직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개 합법적인 조직이란 임의단체가 아닌 각종 법인성격으로 조직되고 등록된 단체를 뜻한다. 즉, 법적인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형태의 법인단체가 되어야 공개 합법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농은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임의 단체적 성격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농’이 주장하는 합법성이란 지배세력이 인정,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화의 성과에 따라 농민대중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며, 대중조직과의 성과 있는 추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대중속에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전농’이 지향하는 공개 합법적 대중조직이란 자체의 투쟁노선에 따라 쟁취되는 성과물이지 법적·제도적 규정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현실적으로는 법치국가에서 일반적인 대중의 자연스러운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내포하게 된다.

결국 ‘전농’이 그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농민운동에 뜻을 가지는 모든 대중이 조직원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공개적 조직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합법단체가 아니므로 해서 일반인이나 일반농민들의 자유스러운 참여가 보이지 않게 어려워지는, 그래서 소위 열렬한 농민운동가들의 특수한 집단적 성격을 띠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전농의 일방적인 조직성격 규정은 그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동안 스스로 공개성·합법성·대중성 등 공개 합법적 대중조직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 개념을 결여하므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활동공간의 위축은 물론 배타적인 집단적 성격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민운동적 활동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법인을 취득하고 합법적 공개조직이 되었으나 농어민후계자라는 특정집단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므로써 배타적 조직이 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단체 등록규정에 따른 정부의 법인제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관행상 법인등록을 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법인 해산 및 유지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민간단체들의 여러 가지의 활동제재를 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인등록 단체들은 자주적인 활동보장이 어렵고, 특히 농민운동단체의 경우는 농민운동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나 방법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합법적 조직의 길을 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사회집단의 조직적 활동을 포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법인제도나 규정에 의해 운동단체나 이익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농민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활동이 합법적 질서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국익과 국민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민운동단체들도 이러한 합법적 근거를 가지면서도 자주적이고 더욱 활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현재는 등록된 법인단체라고 해서 활동의 제약을 더 받거나 발전을 저해당하는 시대가 아니므로 좀 더 많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정책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6-1 농민운동조직의 특성 비교

	전 농	전 여 농	기 농	가 농
조직방법	공개합법적 대중조직	여성대중조직	기독교 농민조직	가톨릭 농민조직
주도세력	빈 소 농	여성 빈소농	기독교계 농민	가톨릭계 농민
운동방향	사회 변혁	사회 변혁, 여성 해방	농민기본권 확립 지위 향상 주체적 농민문화 창조	농촌사회민주화, 농민권익 옹호, 사회정의 실현
운동특색	변혁의 주체 비합법적 투쟁으 로 합법성 쟁취	변혁의 주체 비합법적 투쟁으 로 합법성 쟁취	선교원칙에 따라 그리스도 사랑 실천	종교적 정의 실 천 선교

2. 조직의 성격

조직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그 단체의 주도세력의 성격이다. 농어민단체의 주도세력을 비교해 보면 ‘가농’이나 ‘기농’의 경우 주도세력의 성격에 대해 정확한 기술은 없지만 가톨릭교계나 기독교계 농어민이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계층 구분에 대한 이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6-1). 그러나 ‘전농’의 경우는 빈소농을 주도세력으로 한다는 명확한 기술을 하고 있어 크게 대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나라의 농업구조가 영세규모의 자영농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기업적 영농체는 찾아보기 힘들어 결국 같은 대상을 주도세력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영농규모의 영세성은 앞으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농민층의 분해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농업노

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농의 창출이 기대되지는 못한다. 앞으로 농가간의 이해관계는 영농규모의 격차에 따른 것보다는 품목이나 지역별 격차에 따른 문제가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농’이 빈소농을 주세력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의 농민운동 양상은 농업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활동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어민후계자연합회의 경우는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으로서 농정계획에 의해 육성된 전업농이 주도세력이므로 그 규모에서는 대부분 중농 수준이 넘는다. 이들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한농연)와의 연계투쟁 등은 빈소농 주도세력으로서의 ‘전농’이 빈소농의 권익보장을 농민집단내의 규모격차간 이해갈등 관계로 보았다면 두 단체간 연대활동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결국 농민운동의 일방적인 이론에 따라 우리 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농민운동은 빈소농 중심의 운동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이상과 명분이 강한 주장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농민은 자영농민이라는 성격에서 농업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격차는 뚜렷이 구분되지 못하는 성격을 감안해야 하고 앞으로 상업농화·전업농화정책에 따라 나타나게 될 전업적 자영농의 경우도 그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못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농’이나 ‘기농’의 경우는 그 주도세력이 기독교계의 농민이나 가톨릭교계의 농민으로 될 수밖에 없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 활동이 아무리 대중화되고 사회화된다고 해도 그것은 종교적 단체로서의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문제와 농촌문제 그리고 농민문제를 보는 시각에서는 추구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업이나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는 동조하거나 연대하는 경우가 많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운동단체로서는 소홀하게 다루게 되는 환경과 생명운동 및 종교적 박애주의운동 등은 상호보완적 역할로서 중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3. 운동 방향

‘가농’은 운동목적에서 “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인류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농민사회의 복음화가 기도되고 있어 종교단체로서의 운동방향에 특색을 보이고 있다. 종교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의의 방향이라고 인정되는 농민권익 옹호 등 농촌사회의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농’의 경우도 종교단체로서의 운동 방향에 그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에서 농민의 기본권을 확립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며 주체적인 농민문화를 창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가농’이나 ‘기농’의 농민운동은 1970~80년대의 농민운동 주도세력으로서 그리고 민간운동단체의 성장이 어려웠던 시기를 이어 온 모태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농과 기농은 종교단체라는 한계를 장애로 느끼는 운동가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1990년대에 들어서 민간운동단체가 발족되어 대부분의 농민운동가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된 이후부터 이들 종교단체의 운동 방향은 더욱 선교적인 방향으로 충실하게 정해졌고, 더 이상 농민운동의 종교적 한계를 장애로 느끼지는 않게 되었다.

1990년대에 발족된 ‘전농’과 ‘전여농’의 경우 농민대중에 기반을 둔 민간운동단체로서 결성 당시 결의문에서부터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및 조국통일의 실현에 기여하고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것을 주장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회 변혁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하나는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현 사회가 외세와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받는 억압구조이므로 근로대중(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이 주체가 되는 정부 수립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농’의 경우 후자의 사회 변혁을 주장했고, 그 방법으로 정치투쟁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권력을 농민, 노동자 등 근로대중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당은 물론 농민단체 등의 대중조직도 정치세력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이론은 진보적 사상으로서는 농민정당이나 노동정당 등의 정치 지배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보수적인 농어민이나 일반국민에게는 과격한 논리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농’의 주체세력을 영세빈농으로 정하고 있어 농민 중에서도 영세빈농들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쟁취하려는 운동은 이전까지 농민 권익 보장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기농’, ‘가농’ 등 농민운동단체들의 운동이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조 세력 규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원 구성도 조직 발족 당시 ‘전농’은 ‘기농’과 ‘가농’ 및 ‘독자농’의 연합조직체였으므로 그 숫자에 맞먹는 규모가 되어야겠지만 그 숫자에 크게 모자라고 있는 것은 아직도 많은 수의 회원들이 연합조직인 ‘전농’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 중에는 지금의 ‘전농’의 운동 방향이 급진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보수성향이 있는 농민들이나 농민운동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농민운동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적 농민운동단체가 문제로 안고 있던 종교적 한계성을 탈피했고, 이제 자주적 대중단체로 성장해야 하므로 개혁세력으로서 농민의 대중적 기반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중적 기반은 혁신적 운동목표이어야 하겠지만 너무 과격한 경우는 오히려 보수성이 강한 농촌지역에서의 지지기반을 얻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개혁은 방법상 단계를 뛰어 넘는 혁명적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단계적 개선을 거쳐 점진적인 개혁을 이루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혁명적인 방법은 시기를 앞당기고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회적 불안과 시행 착오의 위험을 안게 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우리 나라 농어촌에서는 단계적 방법으로 대중적 지기반을 유도해 가면서 사회여건 변화를 활용하는 운동 방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4. 농민운동 내용

농민운동단체들의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보면 역사가 가장 오래된 ‘가농’의 경우 중점을 두었던 활동중에 쌀 생산비조사와 쌀값투쟁, 농협 민주화, 수세와 농지세제도 개선, 함평 고구마사건과 노풍 피해보상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 와서 농산물 수입개방 저지와 의료보험 통합개선 등의 문제는 모든 농민단체들의 공통 관심활동이었던 것으로 분류된다.

‘기농’의 경우도 활동내용 중에는 ‘가농’과 같은 이슈가 많았지만 결과를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1990년 이후 ‘전농’의 출범과 이들 농민운동 주도세력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농’의 활동내용에서 토지 개혁, 농지세, 수세문제, 농협부조리와 농수축협 민주화운동, 간척지소유권 분쟁과 소값 피해보상 및 인권침해사례 등 ‘가농’활동과 비슷한 주제를 열거할 수 있지만 ‘기농’의 경우는 1978년에 설립된 기독교 농촌개발원, 1980년의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등 각 지역단위의 교육장과 연구조직을 이용한 농민문제의 이론적 연구 및 교육훈련을 중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에 비해 ‘가농’은 문제 해결의 실천 중심의 활동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많은 실적을 쌓았다. 그 결과 두 개의 농민운동단체가 통합되어 발족시킨 ‘전농’의 운영에서 이론적 지주가 되는 것은 역시 ‘기농’이 닦아 놓은 이론적 기반에 영향이 컸고, 농민운동 역사와 전통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는 ‘가농’의 인물들이 대표로 내세워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조직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며, 그것

표 6-2 농민운동의 내용 비교

가 농	기 농	전 농
쌀 생산비보장운동 농협 민주화 함평 고구마사건 수세 폐지 농지세제도 개선 소값 피해보상 노풍 피해보상 농가부채 탕감 수입개방 저지 의보 통합	농지제도(경자유전) 개혁 농지세 및 수세제도 개선 농협 부조리 개선 농수축협 민주화 유해농약 생산·사용 중단 간척지 싸움 소값 피해보상 농가부채 해결 수입개방 반대 의보문제 해결	토지 개혁 농산물 가공, 관련사업 주도 농산물가거 100% 실현 농산물 수입저지 (UR 협 상 반대) 독점자본의 농민 수탈 저지 재해복구와 보상 의료보장 농협의 농민장악 부채 해결
구판 신용협동사업 쌀 생산비조사사업	농민문제이론적 연구사업 회원 및 농민교육사업	농민회 신문발행사업 작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은 몇 가지의 획기적인 시대적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론이 갖추어진 후배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물론 농민운동단체로서 시대적 과제에 대한 도전없이 실적도 없는 활동을 무미건조하게 이끌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참여와 연구, 교육, 훈련의 비중을 동일하게 두어 이론적 발전과 후배 양성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농’의 경우 활동의 시대적 배경이 ‘가농’이나 ‘기농’과는 다르므로 이들의 운동구호나 활동 내용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주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한 운동과 의사표현 방식은 비타협적이고 이러한 투쟁을 통해 합법성을 획득하겠다는 현실 참여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이것은 전통적 기반이 약하고 재정문제 해결이나 회원

확보가 시급한 경우 현실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대중적 지지기반을 빨리 확보하려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보다 혁명적인 개혁적 의지를 보이므로써 농민권익 쟁취활동에 대표성을 획득하려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농’이나 ‘기농’의 운동방식과는 다른 점이며,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점이다. 특히, 과격한 표현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전농’의 강령중 「농어촌발전대책을 분쇄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농어촌발전대책은 농어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계획으로 내용상의 문제나 발상의 미흡으로 여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거나 잘못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을 고치거나 재편하는 것 등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대안이 없이 농업구조개선의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농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과격성만 노출할 뿐 공감을 가지기 어려운 구호가 된다. 또한 「농협 등 관련 농민조합을 농민이 장악하도록 하다」는 내용의 강령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농협이 농민의 조합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조합장 선출이나 농민의 경영 참여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농민들의 주인의식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나 조직 개편을 주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우리조합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농산물 가격 100% 실현, 자연재해 방지와 복구에 대한 전적인 국가책임, 농민자녀의 전면 무상교육, 빈소농의 부채 전면해결 등은 국가재정 지원 가능성과도 관련되지만 과도한 요구는 일반국민의 대농민 인식을 그르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주장이나 요구 및 과격한 행동은 조직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필요한 대중적 지지기반의 확대와 재정자립을 위한 회원 및 회원단체 확보에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 특히, 자주적 농민운동단체와 같이 자생적 이익단체인 호혜조직의 경우는 권력구조의 형태와 조직활력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나 주체세력들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이슈에

대한 침투성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야만 참여율을 높이고, 활력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새로운 이슈 설정에 전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 설정에서 성원들의 요구 수용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및 그것을 계속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활동의 성과가 따라주어야만 강력한 집행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강력한 집행부의 활력 있는 운영을 위해 새로운 이슈 설정의 압력이 커지면 무리한 주장이나 요구가 등장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모순은 확고한 조직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단체일수록 집행부의 조직내 또 다른 계파나 세력들의 권력도전에 따른 압력 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직의 권력구조를 분산시킬 수 있는 다원지배구조(행정, 입법, 사법 등 권력의 적정 배분)로 만들었을 때 완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회원의 교육, 후계자·육성, 대중기반의 확대, 재정 자립 등의 성과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 록 주요 농민단체 주소록

빈

면

부 록

주요 농민단체 주소록

(가나다순)

단 체 명	우 편 번 호	주 소	전 화	대 표 자
농지개량조합연합회	100-400	중구 쌍림동 146-1	260-5114	유 근 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0-707	중구 충정로 1가 75	397-5114	원 철 회
농촌지도자중앙회	100-707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436-3	(0331) 292-4913	함 기 영
대한양계협회	137-700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588-7651~5	최 준 구
대한양돈협회	135-080	강남구 역삼동 776 양돈회관 4층	553-3942~7	전 동 용
대한잡사회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잡사회관	783-6071~5	최 연 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38-240	송파구 신천동 11-6	240-3114	이 방 호
우리밀살리기운동 본부	121-200	마포구 동교동 158-2 협동교육연구원내	322-5551	정 성 현
임업협동조합중앙회	138-180	송파구 삼전동 115-5	416-9416	이 윤 종
전국농민단체협의회	137-700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521-7181	강 춘 성
전국농민회총연맹	137-130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	529-6347	이 수 금
전국농업기술자협회	140-030	용산구 동부 이촌동 301-87 농업기술진흥관	794-7270	정 장 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37-130	서초구 양재동 332-1 경원빌딩 3층	529-6347	강 유 순
정농회	138-160	송파구 가락동 94-5 누가빌딩 1층	448-8392	김 준 혁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34-763	강동구 성내동 451	485-3141	송 찬 원
한국가톨릭농민회	300-182	대전시 동구 성남2동 1-170	(0547) 236-4028	장 경 암
한국과수협회	441-74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서울대학교내	579-2000~1 (0417)	고 광 출
한국과수묘목협회	330-170	충남 천안시 성정 2동 683-46	568-5337	박 수 복

단 체 명	우 편 번 호	주 소	전 화	대 표 자
한국기독교농민회	110-470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606호	762-7893	김 홍 재
한국낙농육우협회	137-070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588-7055	김 남 용
한국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	137-070	마포구 공덕동 40 번지 풍림빌딩 1층	706-7782~5	엄 홍 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51-060	관악구 봉천10동 41-538	885-1607	이 건 우
한국도피가축협회	137-062	서초구 방배2동 980-32 방배오피스텔 504호	522-4774	장 덕 오
한국4-H연맹	134-070	강동구 명일동 48-1 4-H회관	429-9443	송 천 영
한국4-H후원회	134-070	강동구 명일동 48-1 4-H회관	428-0415	조 규 일
한국상묘협회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783-7673	김 주 현
한국생약협회	130-062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대산빌딩 301호	967-8133	이 중 용
한국양록협회	137-040	서초구 반포동 701-17 임송빌딩 502호	511-4540	이 덕 신
한국양봉협회	120-126	종로구 종로6가 173 삼보빌딩 310호	763-1372	정 해 운
한국유기농업협회	138-160	송파구 가락동 600 농수산 물 도매시장 3층 98호	406-4462	유 달 영
한국종균협회	130-749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 공과대 신관 524호	392-0950	유 준
한국종묘협회	137-130	서초구 양재동 275-2 원서트홀 오피스텔 706호	578-7637	설 권 석
한국종축개량협회	137-070	서초구 서초동 1516-5	588-9301~5	설 동 섭
한국포도회	741-820	경북 금릉군 봉산면 덕천리	(0547) 436-4028	김 성 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121-200	마포구 동교동 158-2 협동교육연구원 4층	3141-5691	황 민 영
한국화훼협회	137-130	서초구 양재동 232 농수산물 유통공사 화훼공판장 1층	579-2000~1	김 용 성

참 고 문 헌

- 김동희, “한국농민단체 현황과 농민운동의 방향에 관한 연구”, 「21세기 농정발전방향 구상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 농정자료 시리즈 3, 1988. 8.
- 김성호 외, 「한국농정 40년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 농협중앙회, “농민단체와의 이해증진”, 「농협의 농정활동」3집, 1991. 3.
- 서울대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회, 「농민층 분해와 농민운동」, 미래사, 1988.
- 신언관, “전국농민회 총연맹 결성의 의의와 과제”, 「농어촌 사회」(농어촌사회연구소) 통권 10호, 1990 여름호, pp. 19~32.
- 이우재, “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 「농촌현실과 농민운동」, 역사와 기독교 제9집, 민중사, 1984.
- , 「한국농민운동사 연구」, 한울, 1991.
- 장상환, “농민운동조직 무엇이 문제인가”, 「말」, 1988년 5월호.
- 전국농민운동연합 조직통일위원회 편, 「자주적 농민운동론:군농민회를 중심으로 본 조직방향과 과제」, 도서출판 죽산, 1989. 11.
-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의원회 자료, 각연도.
- , 「전농」 창간호, 1990. 7.
- 전국농민회총연맹준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대회」, 1990. 4. 24
- 정책실, 「‘전농’ 결성과 농민운동의 방향」, 정책자료 90-1. 1990. 4.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 1호 ~ 6호.
- , 대의원총회 자료(제4차 및 제5차).
- 정호경, “현대 한국천주교회와 농민운동”, 「더불어 살기 운동」 한길사, 1986.

조성우 대표집필, 「한국기독교농민회 10년사」, 한국기독교농민회, 1992.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농민문제의 발생배경”, 「한국천주교회
의 위상」, 분도출판사, 1985.

한국가톨릭농민회, 창립20주년 기념대회 자료집, 1986.

——, 1990년도 제20차 대의원대회 자료집.

——, 창립 25주년 기념대회 및 추수감사제 자료집, 1991.

——, 1994년 제2차 확대인원연수 및 제24차 대의원 총회 자료집.

——, 「한국가톨릭농민회 역사」(미발간 자료집).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농어촌사회」 1990 여름호(통권 10호), 1990. 6.

——, 경제협동활동 사례집(1), 1989. 7.

한국농업근대화연구회, 「농업근대화」 1집(1966) ~ 10집(1979).

연구자료 D102

주요 농민운동단체의 형성과 전개과정

찍은날 1995. 3. 펴낸날 1995. 3.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